

한국사회 50년: 사회변동과 재구조화*

홍두승** · 박경애*** · 이 건**** · 김현희*****
· 이세용***** · 박미해*****

〈목 차〉	
I. 머리말	V. 노동운동 50년
II. 인구변동과 인구정책	VI. 교직의 여성화 경향과 교사
III. 직업구조와 직업의식	의 지위
IV. 노동통계의 변천과 전망	VII. 여성과 가족의 반세기 삶

I. 머리말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으며, 그 결과와 여파는 우리사회의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상당히 빠른 변동을 겪어온 나라로 사회가 새롭게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많은 사회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었다. 어떤 체제에서나 사회변동이 급격할 때에는 그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마찰이 생기고 여러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들은 사회변동에서 초래되는 불가피한 과도기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 러므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봄으로써, 공간적으로는 국제화, 세계화를, 시간적으로는 미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통계청 사무관.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당면할 미래에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50년이라는 반세기를 돌이켜 보면서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나, 갈등, 적응양상 등을 이해하고 설명해 보기 위하여 한국사회의 변동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의 한국사회는 새로운 도약의 발돋움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방 5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사회 각 분야의 발전과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50년 동안의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가 한국의 인구구조, 산업 및 직업구조, 여성의 지위 및 가족, 노동운동, 교육 등에 이루어 놓은 발전과 그 성과를 검토할 것이다. 이 여섯 분야는 사회발전의 근간이 되는 분야로서 그 변모를 추적해 보는 것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지금은 국제화·세계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 낸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구상해 보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Ⅱ. 인구변동과 인구정책

1. 들어가며

한일합방, 광복, 6.25 전쟁이라는 사회적 혼란기를 거쳐, 1960년 이후 우리 사회는 너무나 급속한 사회변동과 인구변동을 겪었다. 해방과 6.25전쟁에 기인한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도시화의 기틀을 형성했으며, 산업화^외 함께 시작된 지역편중적인 발전정책이 도시화 및 지역별 인구편중을 심화시켰다. 사회경제적 발전 및 가족계획사업이나 의료보험정책 등의 인구정책 실시로 불과 3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고출산율과 고사망률 시대에서 저출산율과 저사망률 시대로의 인구변천을 완료했다. 저출산율과 저사망률로 인하여 1980년 후 반부터 자연인구증가율은 1% 내외 수준을 보여 주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및 규모의 변화는 사회변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일정 기간 중 특정 지역의 인구변동은 그 지역내에서의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차이인 인구의 자연증가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인구이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출생과 사망은 생물학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출생수준과 사망수준이 결정되며, 출생수준과 사망수준은 사회의 제반 구조 및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인구이동은 개인들의 소속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맥락에서 일어나며, 인구이동의 흐름은

사회, 정치, 경제 구조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라는 인구과정과 그 결과이자 원인이 되는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를 중심으로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사회변동이 인구변동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인구 현상이 사회구조 및 개인에게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전망해봄으로써 인구변동과 사회변동간의 상호관련성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관련 연구자료를 종합 정리하는 문헌연구 방법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및 통계청의 원시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절충하고자 한다.

2.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성별 인구구조는 여자인구에 대한 남자인구의 비인 성비로 파악되고, 주로 출생시의 성비 및 연령별 사망률에 의해 결정된다. 연령별로 성비를 보면 5세 미만의 경우 1960~85년까지는 107~11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0년에는 112로 증가하였다. 특히 출생시 성비는 1980년 중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4년 현재 115.5로 불균형이 심한데, 이는 소자녀화 되어 가면서 성선별적 출산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시 성비 불균형은 결혼적령기의 남녀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여 2010년경부터 결혼적령기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할 때에는 배우자 선택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혼인연령은 급속히 상승하고, 미혼율이 높아지며, 알코올중독, 자살, 성범죄 등 사회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사망수준을 높히고 출산력에도 영향을 주어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또한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박경애, 1993; 주학중·김태현, 1994). 또 한편으로 여성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여성의 지위가 향상될 것이며, 여자가 연상인 혼인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남편과의 사별 후 여성의 홀로 지내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Park and Cho, 1995), 부정적인 효과가 압도적일 것이다.

우리 나라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는 1960년에는 고출산과 고사망의 특징을 지닌 피라미드형이었으나, 1990년에는 저출산과 저사망의 안정인구형인 종형으로 변화되었으며, 저출산 수준이 지속되고 노령층의 사망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항아리형으로 변할 것이다(통계청, 1991). 15세 미만의 유소년인구는 1960년 42.3%를 차지했으며, 1972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 저하되어 1990년에는 25.8%로 감소했다.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1960년 54.8%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0년 69.2%에 이르고 있다.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1960년 2.9%에서 1990년 5.0%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변동으로 유소년부양비는 1960년 77.3%에서 1990년

37.4%로 급격히 감소했고, 노년부양비는 1960년 5.3%에서 1990년 7.2%로 증가했다.

노인인구의 급성장 추세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생활수준의 개선, 의약기술의 발달과 보건위생의 개선, 이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이 주된 원인이 된다. 1991년 현재 우리 나라의 출생시 기대수명이 남자 67.7세, 여자 75.7세로 남녀간 8.0세의 평균수명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통계청, 1993). 이러한 평균수명 차이로 인하여 1960년 65세 이상 노인의 남녀 비율이 남자가 39.8%, 여자가 60.2%에서 1990년에는 남자가 37.7%, 여자가 62.3%로 변화하였다(통계청, 1995d). 이처럼 성별 노인인구수의 불균형상태는 노후의 고독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 노인들은 퇴직으로 인한 수입의 격감,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원, 취업곤란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데다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족규모의 축소와 핵가족화가 노인부양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대책, 건강관리, 노인인구의 재활용, 노인의 여가생활 등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출산수준의 감소로 인한 자연인구증가율의 급격한 감소는 과대한 인구규모의 압력을 감소시켜 주기는 하지만, 유소년인구구성비를 급격히 변화시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유소년인구구성비의 감소는 신규 생산연령인구를 감소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고, 신규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훈련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출산조절정책도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고용구조는 남자 중심, 짧은 연령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의 압박이 큰 사회이기 때문에, 신규노동력 활용을 위한 출산증가정책보다는 여성 노동력의 활용, 정년 연장 및 노인 노동력 활용, 노동력의 전문화, 수요와 공급의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출산율 감소와 출생성비 불균형

전통사회에서 출산은 인간의 원초적인 속성에 의한 결과이었으며 가계계승은 중요시되었고 사망률은 높았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를 충분히 낳는 것이 관습이었다. 산업화와 함께 출산행위에도 합리성이 부여되기 시작하여, 자녀의 효용성 면에서 적은 수의 자녀를 낳아 자녀교육을 강화시키는 가치가 보편화되면서 오늘날은 부부가 자의적으로 출산행동을 조절하고 있다. 소산(少產)은 모성의 출산부담을 감소시켜 모성보건을 향상시켰으며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생활주기상 시간적 여유를 갖게 했다.

가족주기의 변화는 출생자녀수의 감소 및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주기란 부부의 결혼에서 사망까지의 전기간을 가족생활을 특징지우는 인구학적 사건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최근들어 초혼연령의 상승세는 둔화되고 평균수명은 더욱 연장될 전망이므로 가족주기의 전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공세권 외(1987: 131-156)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에서부터 자녀출산완료시까지의 가족형성 및 확대기는 단축되고 있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기간은 길어지고, 자녀결혼완료이후 남편의 사망을 거쳐 부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가족해체기는 근년에 올수록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 즉, 자녀없이 부부만이 지내는 빈둥우리(empty nest)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 즉, 자녀와 사별 후 혼자 살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노후에 대비한 개인 및 사회복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구동태신고 결과에 의한 최근의 출산력 변화를 보면(통계청, 1995a),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인 조출생률은 1985년 16.2명에서 1987~1989년 15.2명이라는 최저수준으로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 16.5명을 나타내고 있다. 합계출산율 역시 1985년 1.7명에서 1987~1989년에 1.5명으로 최저 수준을 나타내다가 그 이후 약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1.7~1.8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로 볼 때 1987년 이후 20세 초반 연령층에서의 출산율은 계속 줄고 있는데 반해, 20대 후반 이후에서의 출산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출산순위별로 볼 때 1980년대 후반부터 둘째아의 출생구성비 및 셋째아 이상의 출생구성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1985~1994년 동안 초혼부터 첫째아 출산까지의 간격과 첫째아에서 둘째아, 둘째아에서 셋째아의 출산간격은 길어지고 있는데 반해, 셋째아부터 넷째아 이상까지의 출산 간격은 줄어들고 있고, 모의 평균 출산연령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넷째아 이상의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 수준에 지나지 아니함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출산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리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단 최근의 출생수 증가는 인구의 연령구조의 특성상 1968년 이후의 출생 코호트(cohort)가 출산연령에 이르러 출생수 자체가 많아지는 반향효과(echo effect)가 있을 뿐만 아니라(통계청, 1991) 1980년대 중반에 비하여 최근들어 둘째아나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인구가 다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아나 셋째아 이상의 출산이 다소 늘고 있는 이유는 1980년대의 전반적인 사회의 구조적 변동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남아선호의 성선택적 출산 전략이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104-107이 정상적인 남성 대 여성 출생성비라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

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출생성비가 계속 높아져 1994년에는 115.5를 나타낸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인 관념이 출산행위에 아직도 영향을 주어 범띠, 용띠, 말띠 해에는 여아 출생을 기피하여 출생수 뿐만 아니라 출생성비가 주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통계청, 1995a), 이는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출산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낙태로 인한 출생성비의 불균형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 및 모의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불균형은 모의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셋째아 이상의 경우 200을 상회하고 있으며, 영남 지역에서는 300을 상회하기도 한다. 이는 출산력이 저하되면서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이 크게 영향을 주어, 아들을 골라 냉기 위해 과학적 근거조차 없는 불법 시술이 이루어지고, 양수검사, 융모 막검사,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감별이 이루어지며, 낙태수술 등 첨단 의료기술을 남용하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경험적으로도 자녀의 성별 구성에 따라 피임실천 및 인공임신중절이 달라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Cho et al., 1994).

한편, 우리 나라의 출산력 변천에는 초혼 연령의 상승, 피임의 실천 및 인공유산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며(Kwon, 1981; Kim, 1994).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교육이나 도시·농촌 거주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초혼연령, 피임사용, 인공임신중절 등 인구생물학적인 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대희·김유경, 1992). 인공임신중절의 성행은 그 사회의 윤리성 및 성문화와 관련이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결혼, 성, 임신, 출산이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통제된데 반해, 오늘날은 성문화가 개방되면서 결혼, 성, 임신, 출산을 각각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고 있고, 혼인중의 임신에 대해서도 피임에 실패했거나 자녀의 성선택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명경시 풍조 형성이라는 윤리성 차원에서도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이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

4. 사망원인구조의 변화와 성별 차별 사망력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식생활 개선, 공중보건 및 위생 관리가 철저해지며, 항생제나 예방접종 등의 의료기술 보급으로 사망력은 저하되기 시작하여, 사망력의 감소 역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발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사망력의 감소가 경제발전 후에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발전 이전에

사망력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는 서구로부터 항생제를 포함한 보건 및 의료 기술의 전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망률은 특정 사회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 여겨지고 있으며, 영아사망률과 출생시 기대수명은 사회의 발전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인의 사망자료는 부족하여 과거의 사망수준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평균수명에 대한 추정치도 다양하다. 1950년대 남성의 평균수명은 47세에서 53세 범위에, 여성의 수명은 53세에서 69세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965~1971년 동안 남성은 51세에서 65세에, 여성은 57세에서 69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UN, 1982a; 권태환·김두섭, 1990). 그 후 평균수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91년에 남자 67.6세, 여자 75.7세를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1993).

영아사망률은 직간접적으로 건강관리 대책의 영향을 받고, 전체 연령층의 사망수준과는 별개로 영아의 사망수준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둔다. 한국의 영아사망률에 대한 추정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영아사망률이 급속도로 변화한 데는 모두가 일치한다(김정근 외, 1991). 1955~60년 동안 출생아수 1,000명 당 100명의 영아가 출생한 지 1년 이내에 사망하였으나, 경제개발이 이루어진 1960년대 이후 영아사망률은 급속히 낮아지기 시작하여 1991년에 10명 이하로 낮아지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통계청, 1995a). 그러나, 광복이후 1980년까지의 영아사망률을 미국의 사망패턴과 비교해 볼 때, 영유아사망률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 성인의 역학 변천 속도에 맞추어 어린이의 사망원인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못하여 (Lee, 1985), 영유아 보건 향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 의학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등은死因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염성질환이 주요 사인이 되던 시기에서 퇴행성, 인공질환이 주요 사인으로 대두되는 변천기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역학변천이라 일컫는다(Omran, 1971). 우리 나라의 사인구조 변천 과정을 살펴 보면, 1930~1940년대는 소화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 그리고 전염성질환 및 기생충질환이 각각 1, 2, 3위를 다투다가, 1960년대에는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이 1, 2위로 바뀌면서 신생물이 5위로 부상하였다(김정순, 1993). 1970년부터 현재까지 5대 사인순위는 변동없이 순환기계질환이 1위, 신생물 2위, 손상 및 중독이 3위, 소화기계질환이 4위, 호흡기계질환이 5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 중 3대 사인인 순환기계질환, 신생물, 중독과 손상에 의한 사망비율은 197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3대 사인군의 비중이 1985년 58.5%에서 1994년에

65.1%로 증가하였다(통계청, 1995b).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사망원인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통계청, 1995b), 1985~1994년 동안 제1순위인 순환기계질환의 구성비는 1985년 31.8%에서 1991년 29.9%로 감소한 반면, 각종 암은 15.1%에서 21.3%로, 각종 사고사는 11.6%에서 20.0%로 증가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사인별로 1985~94년 동안의 사망률 변화 추이를 보면, 선진국에서 비중이 높은 폐렴, 당뇨병, 허혈성심질환, 대장암에 의한 사망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흡연, 스트레스, 공해, 육류섭취 등의 증가로 장래에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고혈압성질환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동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감소추세인 사인은 위암, 간암, 교통사고 인데, 이들 사인에 의한 사망률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성별 차별 사망력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몇몇 저개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까지 0~4세 남자 어린이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전통적인 가족구조 하의 남아선호사상에서 기인된 차별 양육 및 보호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었다(Kwon, 1986: 16). 그 이후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인구동태신고 결과에 의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망수준이 비슷한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0~4세의 아동기에 여아의 사망수준이 남아의 사망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박경애, 1995).

반면에 15~69세 연령층에서는 1994년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연령층에서 1970년 이래 남성보다 여성의 사망수준이 더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의 사망력은 콜-디메인(Coale-Demeny)의 서부모형 생명표(West Model Life Tables)와 일치하지만, 남성의 사망력은 서부모형과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40세 이상에서 한국 남성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Coale, 1980; Goldman, 1980; Kwon, 1986). 따라서, 우리 나라의 성별 사망유형은 UN이 1982년에 만든 개발도상국을 위한 모형생명표 다섯 가지 유형 중 남자는 극동유형(Far Eastern pattern)에, 여자는 일반유형(general pattern)에 분류되었다(UN, 1982b; 권태환·김태현, 1990). 미국의 백인 및 흑인과 비교해 볼 때도 한국 남성의 사망률이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Lee, 1985).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사망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인은 식도암, 만성 간질환 및 간경변, 간암, 불의의 사고(의사, 추락, 교통사고 등), 폐암, 결핵,

자살이며 이들 사인에 의한 남성사망률은 여성사망률의 2~7배이다. 이들 사인은 음주 및 흡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의 활동성 및 남성다움과 관련이 있어 직업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음주나 흡연으로 해결하는 직장문화가 바뀌어야만 성별 사망력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이촌향도 인구이동과 수도권 인구집중

해방과 국토양단이 대규모 인구이동을 초래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일본, 만주 및 중국 본토 등에 거주하던 교포와 월남민들은 주로 자기 출신 도의 도시에 정착하거나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에 정착한 결과 도시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궁핍한 농촌경제 하에서 대구폭동사건(1946), 제주도 폭동사건(1948), 여수반란사건(1948) 등 공산세력에 의한 일련의 무장폭동이 농촌의 치안을 위협하여 그나마 치안이 유지되고 있던 도시지역으로의 피난탈출도 도시화의 한 요인이 되었다(윤종주, 1986). 6.25전쟁을 계기로 월남민과 피난민이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로 몰려 영남지방은 과밀화현상을 보였고, 1955년~60년 동안 피난민들의 귀환이동과 재정착과정이 서울과 경기도 도시 지역의 인구성장률을 증가시켰다.

1960년대의 경제발전과 함께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가 도시 및 개발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촌향도의 국내이동은 격화되었다. 197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 인구분산화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도시화는 계속 진전되었으며,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일부 대도시지역이 고도성장하면서 1960년대보다 더욱 심한 지역별 인구증감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우리 나라는 서울과 부산의 인구분산화정책 때문에 서울과 부산의 인구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계속되었다. 1985년부터 1990년 사이에 경기도와 인천의 순이동량이 두드러졌으며, 서울은 이 기간 동안 5만의 전출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인구를 흡입하여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1960~90년 기간중의 빠른 도시화의 결과로 한국의 도시화율은 1960년의 28.0%에서 1990년에는 74.4%로 급등하였고, 행정구역상의 시인 도시수도 1960년의 27개에서 1990년에 73개로 증가하였다. 도시화는 60년대 후반에 가장 빨리 진행되었다가 다소 약화 추세에 있다. 도시인구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은 자연증가, 이동, 시경계확장, 시승격인데, 1960년대 후반기를 제외하고 자연증가에 의한 증가분이 가장 많다. 인구이동에 의한 도시인구 증가 기여도

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순이동에 의한 증가분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최진호, 1995; 통계청, 1989).

그러나, 인구이동에 의한 도시화는 모든 시도들에서 골고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울과 그 주변 지역 위주로 국한되었다. 1960년대는 서울의 성장, 1975년 이후부터는 서울보다 근교지역의 인구가 더 빠르게 성장하여 교외화에 의한 대도시권의 형성이 가속화되었다. 이촌향도와 수도권 인구집중은 1960년 이후의 국가정책들이 집적경제의 효율성에 치중하여 자본의 투자, 산업의 육성, 주거환경의 개선 등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화와 함께 추진되어 온 정부의 주요 발전정책의 기능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1960~90년 기간중 우리 나라 전국인구는 총 1,840여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서울이 44.3%, 경기도가 20.7%, 인천이 7.7%를 흡수하여 수도권이 전국인구 증가분의 72.7%를 흡수하였고(최진호, 1995), 1995년 현재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45.3%로, 1990년 42.8%보다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통계청, 1996).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인 인구이동통계에 의하면 수도권으로의 전입은 1988년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전입자 중 서울 전입비중은 1970년 초반 76.5%에서 1994년 5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로의 전입비중은 1970년 초반 23.5%에서 1994년에 38.2%로 증가추세이다(통계청, 1995c).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를 사용하여 1985~90년 인구이동 특성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최진호, 1995: 164-175) 수도권 전입자의 특성 중 두드러진 점은 서울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15~24세의 청년층과 고학력인 미혼 전입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 대학 등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젊은 학생층과 보다 나은 취업기회를 얻기 위한 서울 전입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25~34세의 결혼초기 연령층은 주택값이 싼 근교지역으로 전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도권 전입자들은 제조업 부문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출자, 특히 서울로부터의 전출자는 고학력 비율이 높고 유배우비율이 높으며, 직업분포는 전입자에 비해서 농, 임, 어업직의 자영업자는 대폭 늘고, 전문, 기술직 및 행정관리직의 비중은 다소 늘어 고학력자의 전출을 반영하고 있다.

1964년부터 수도권 인구분산 문제가 정책과제로 거론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경과하였으나, 수도권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대도시의 과밀문제 즉,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의 악화를 가져왔다. 반면에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농촌인구의 절대인구 감소 현상은 농가구 및 농가인구의 감소를 가져온 동시에 미혼의 청장년층 인구의 이농현상으로 농촌의 연령구조가 표주박형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노동력의 고령화와 여성화 현상을 가져왔으며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다(윤종주, 1986). 농촌에서는 자녀교육 또는 취업을 이유로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의 고급인력의 부족, 생활의 불편가중 등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이것이 또 다시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인구이동은 젊은 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입이 많아지는 도시인구는 젊어지게 되고, 농촌에서는 점점 고령화가 된다. 따라서, 성 및 연령별 출산율과 사망률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도 간접적으로 성 및 연령별 인구구성을 변화시켜서 조출생률, 조사망률 및 자연인구증가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1964년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을 효시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1),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1977),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1), 수도권정비 기본계획(1984) 등을 통하여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억제 및 이전 유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서울소재 대학의 신·증설 억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의 주요 정책들이 실시되었으나, 1994년에는 규제일변도 시책을 지양하고 국제, 첨단, 정보 업무 시설 등의 육성이 가능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들이 실패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인구이동 양상은 서울에서의 전출이 늘고 있으며, 서울에서 수도권외로의 전출자 중에서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음을 보여 준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억제보다는 지역 개발을 촉진시켜 인구분산의 기반을 지방에 조성하여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발전은 지방 스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적절한 투자와 권한 이양으로 이를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6. 소결

1945년의 해방과 6.25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기는 제외하더라도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불과 30년만에 우리는 높은 출산율 및 사망률 수준에서 낮은 출산율 및 사망률 수준으로의 인구변천을 보여 주었다. 1990년 이후 출산율이 약간 상승하였으나 선진국과 같은 대체수준 이하의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출산력이 낮아지고 사망력 또한 낮아지면서 주요 인구학적 사건이 일어나는 가족생활주기가 달라지고 있으며,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생활에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자녀 양육 및 교육기가 줄어들고, 자녀가 집을 떠나 부부만 남게되는 빈

동우리 시기가 길어지며, 남편 사망 이후 여성의 홀로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를 위한 개인적 및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력과 사망률의 변천은 필연적으로 인구구조의 변천을 가져와 아동인구의 감소와 노년인구의 급증으로 사회의 노인부양부담이 크게 증가되었다. 소자녀관하에서 남아선호사상이 출생시 성비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남녀의 사망률 격차는 노년기의 여성인구 과잉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하며, 신규노동력 감소로 인한 노동력 창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출산력 변천에 초혼연령, 피임실천 및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인구 생물학적 중간변수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초혼연령의 상승세는 둔화되고,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은 상한선에 이르러 인공유산의 영향력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남아출산을 목적으로 한 태아의 성감별 및 인공유산까지 이루어져 출생시의 성비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공유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출생시 평균 기대수명은 1980년대 후반 이후 70세를 상회하고 있고, 영아사망률 역시 1990년대부터 인구 천 명당 10 이하로 저하되었다. 1970년대에 사망원인구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 감염성질환, 소화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의 중요성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순환기계질환, 각종 암, 각종 사고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역학변천의 마지막 단계인 퇴행적 및 인위적 질병기를 맞이하고 있다. 영유아 및 중년층 이후의 남성 사망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영유아 보건 향상 대책 및 음주와 흡연을 줄일 수 있는 생활양식이 요구된다.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대규모 국내 인구이동은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급속한 공업화가 추진되자 이촌향도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이와 같은 경향은 1980년대에도 지속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다소 수그러지는 경향이다. 이촌향도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인구이동의 흐름은 도시와 농촌의 사회경제적 기회의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나, 도시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가속화되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 및 기능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시에서는 인구 과밀문제가 발생하였고, 농촌에서는 생산연령인구의 부족과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농촌가구의 재생산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 낙후된 지역의 집중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상황 기술이나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

인의 이주동기에 대한 분석에서 벗어나, 도시의 성장이나 농촌의 인구감소 또는 인구이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서 지역적 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박경애, 1991; Ko, 1991).

Ⅲ. 직업구조와 직업의식

1. 들어가며

1945년 해방 이후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크나큰 변화를 경험해왔다. 생활환경의 외형적 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해방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직업구성과 직업관이 어떻게 변모해왔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변동과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직종은 소멸되어나가기도 한다.

노동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해방 직후와 비교해본다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직업의 종류가 크게 늘어났고 직무의 내용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최근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관리소가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1996년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수는 11,537개로 추정되어 10년전인 1986년의 10,451개와 비교해보더라도 1,000여개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 본 소고에서는 해방후 지난 반세기간의 변화를 가용한 통계자료를 통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구조의 변화는 통계적 자료의 외형적 모습만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인구학적 구성의 변화를 통하여 변화의 단면을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2. 직업구조 변화의 특징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되어 온 직업구조의 변화 가운데 가장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① 농·림·수산업 등 1차산업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도시근로인구의 증가, ② 현대적 산업조직의 발달에 따른 조직생활자의 증가, ③ 여성의 경제참여율 증가와 여성참여 직종의 다양화, ④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노동의 질 변화 등이다.

(1) 「중앙일보」 1996년 1월 28일자 참조.

1) 산업화와 노동인구 구성의 변화

우선 전반적인 직업구조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것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종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 및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노동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직업구조도 변화하였다. 특히 1960년대에 들어서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대로 1950년대 중반에 취업자의 8할이 농·림·수산업 종사자였던 것이 40년이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15%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에 생산·운수장비운전사·단순노무자 등 생산·기능적 종사자들은 크게 증가하여 1950년대 중반에 9% 미만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35%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다소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취업인구 중 다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전문·기술·행정·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 등 흔히 화이트칼라로 지칭되는 정신노동자들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전문·기술·행정·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를 보면 1955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5.2%에 불과하였으나 1993년에는 25.2%로 증가하였다. 나아가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1994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²⁾에 따르면 ‘고위임직원

<표 1>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연도	전문· 기술행정 · 관리직 종사자	사무관련직 종사자	판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림 · 수산업 종사자	생산· 운수장비 운전사· 단순노무
1955	2.8	2.4	4.5	2.1	79.5	8.7
1960	3.6	2.6	8.3	6.0	66.2	13.3
1965	2.9	4.1	12.0	6.4	58.4	16.3
1970	4.8	6.0	12.4	6.4	50.2	20.2
1975	3.6	6.4	13.0	7.1	45.8	24.1
1980	5.3	9.3	14.5	7.9	34.0	29.0
1985	7.3	11.5	15.5	10.8	24.6	30.3
1990	8.7	13.0	14.5	11.2	17.8	34.8
1993	10.2	15.0	15.9	12.3	14.6	31.9

출처: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5. 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 통계청, 『인구및주택센서스 보고서』, 각년도.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매년 8월 중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충화계 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2,7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및 관리자' 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가 15.5%, '사무관련직 종사자' 가 12.3%가 되어 27.8%가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³⁾(노동부, 1995).

2) 관료화와 조직생활자의 증가

공업화, 도시화로 인한 농·림·수산업 종사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바로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의 감소를 수반하고 있다. 농업 등 1차산업은 그 성격상 주로 가족단위의 자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홍두승, 1983: 68-69). <표 2>에서 보면 1960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가 8할가까이에 이르고 있으나, 30여년이 지난 1995년이 되면 이들의 비율은 4할에도 못미치고 있다. 반면에 전체 근로자 중 피고용자의 비율은 1960년에는 22.2%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60%를 상회하게 되었다.

피고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사업을 스스로 꾸려가는 고용주 또는 자영업주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그 대신 조직생활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피고용자 비율의 증가는 관료조직의 증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1950년대 이래로 산업조직 및 그 구성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종업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의 수는 1953년에 3,636개소, 조직원은 23만 9천 8백명이었으나 40년이 지난 1993년에 이르러서는 153,545개소의 573만 3천 8백명에 이르러 사업체수로서는 42배, 그리고 조직원은 24배 증가하였다

<표 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1960-1994

(단위: %)

연도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피고용자
1960	47.2	30.6	22.2
1965	36.8	31.0	32.2
1970	34.2	26.9	39.0
1975	34.3	25.1	40.6
1980	34.0	18.8	47.2
1985	31.3	14.6	54.1
1990	28.0	11.4	60.5
1995	27.9	9.6	62.5

출처: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5. 8; 통계청, 『1996년 1/4분기 고용동향』, 1996. 5; 통계청,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각년도.

(3) 통계청은 1992년말에 1974년 이래로 사용해왔던 직업분류방식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마련하였다.

(김필동·김병조, 1995: 281 참조). 한편 정부조직에 있어서도 군인을 제외하고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 수는 1955년도에 23만 6천명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90만명에 이르게 되어 이 기간 중 약 4배에 가까운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은 절대수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국민 1,000명당 공무원의 수에 있어서도 약 2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1950년대 중반에는 10-11명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20명선을 상회하고 있음을 본다 (김필동·김병조, 1995: 290 참조).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직종의 다양화

1950년대 이래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직종에서 여성의 점유율이 크게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사무직 종사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1955년에는 6.6%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에는 종사자의 반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도 「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사무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63%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문,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도 그 증가의 폭이 커서 1955년에는 여성의 비율이 18%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60.5%로 증가하였다(〈표 3〉).

이 기간 중에 발생한 변화 중의 하나는 전통적으로 남녀간 분리되어 왔던 직종에 점차 남녀간 혼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던 직종에 여성의 진출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반대로 여성들이 담당해왔던 영역에도 남성들이 진출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성의 역전 현상마저도 목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약사의 경우 1950년

〈표 3〉 직종별 여성비¹⁾

(단위: %)

직 종	1955	1970	1980	1990
전문·기술직 종사자	18.0	29.6	38.6	60.5
행정·관리직 종사자	2.6	3.6	1.5	3.7
사무직 종사자	6.6	20.4	49.8	51.6
판매종사자	39.8	50.2	54.4	54.7
서비스직 종사자	84.8	131.5	105.1	105.5
농·축·임·수산업	83.1	70.8	82.2	78.7
생산·운수장비운전사·단순노무자	16.6	31.5	35.0	29.0

주: 1) 여성비는 남성 100명당 여성의 수로 산출됨.

출처: 통계청, 내무부 통계국,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보고』, 1955; 경제기획원, 『총인구및주택조사보고』, 197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0.

경에는 전체 등록된 약사 가운데 여성의 차지한 비율이 18%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여성의 전체 약사의 60%가까이를 점하게 되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고급 의료인력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50년에는 전체 의사의 7.4%, 치과의사의 6.2%, 한의사의 0.1%가 여성되었으나 1994년에는 의사 17.6%, 치과의사 19.0%, 한의사의 7.8%로 증가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보건복지부, 1949-1994).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와 같은 직종도 여성 중심의 직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용한 통계를 통해 1970년에서 1994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임상병리사가 16.9%에서 67.3%로, 방사선기사가 5.8%에서 25.7%로, 치과기공사가 1.1%에서 26.3%로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화의 추세가 급속히 진행된 대표적인 영역으로 각급 학교의 교사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초에는 초등학교 교사의 22.0%, 중등학교 교사의 14.7%, 고등학교 교사의 8.2%가 여성되었으나 1995년도에는 각각 55.6%, 49.8%, 23.6%로 증가하였다(교육부, 1960-1995). 특히 1995년도의 경우 서울과 부산 등 거대도시의 초등학교에서는 여교사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유치원 교사는 1965년도에 원장, 원감을 포함하여 유치원 교사 중 여성의 비율은 72.4%였으나 10년 후인 1975년에 이르면 78.4%로 증가하게 되고 1985년에는 다시 89.9%로, 그리고 1994년에는 94.8%로 더욱 높아졌다. 원장 및 원감을 제외한 교사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0년도의 통계는 전국의 유치원 교사 14,958명 중 남성은 18명에 불과하며 99.9%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물론 전통적으로 여성에 의해 담당되어 왔던 직종에 남성의 진출도 목격되고 있다. 최근의 어느 시사월간지는 “이색직업”으로 이들을 소개하고 있다.⁽⁴⁾ 유치원 교사, 전화 교환수, 피부미용사, 영양사 등 아직까지는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특이한” 직업으로서 남성의 비율이 크지 못하지만 남성의 지속적 진출이 예견되고 있다.

4) 교육수준의 향상과 노동의 질 변화

직업구조가 변화하면 그러한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노동력의 질 또한 변화하게 된다. 예전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직종이 증가하면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인력의 교육수준도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자격요건

(4) 「신동아」 1996년 5월호 참조.

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학력제한을 두고 있다. 전문성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학력의 수준도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보상도 높게 마련이다. 따라서 높은 학력을 갖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직업일수록 그 직업의 위신은 높아진다. 다시말하자면 그 직업의 위신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학력에 의해서 많은 부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1955년에는 9할 이상이 국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반면 중졸 이상의 학력자는 5%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 국졸 이하는 1/3정도에 불과하고 반면에 대졸 이상 14%를 포함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성인인구의 절반을 이루고 있다(표 4).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대로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성인 인구 가운데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1% 남짓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또한 과거보다는 더 많은 교육과 훈련기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현재는 치과의사가 되자면 의사와 마찬가지로 예과 2년을 포함하여 6년의 교육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59년 대통령령으로 치의예과를 설치하도록 규정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4년 교육으로 치과의사를 배출하였던 것이다.⁽⁵⁾ 이러한 분화는 다른 분야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⁶⁾

<표 4> 국민의 학력 구성비(25세 이상 성인)

(단위: %)

연 도	국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947**	95.0	4.4	—	0.6
1955	91.8	5.3	1.7	1.3
1966	79.6	11.1	5.6	3.7
1970	73.4	11.5	10.2	4.9
1975	65.5	14.8	13.9	5.8
1980	55.3	18.1	18.9	7.7
1985	43.4	20.5	25.9	10.2
1990	33.4	19.0	33.5	14.1

주: 각 학력 재학자 및 중퇴자는 이전 학력에 포함시킴.

*중졸의 범주속에 구제 중학교 졸업자도 포함되어 있음.

**1947년도의 자료는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음.

출처: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5. 8.

(5) 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경우는 치의학과 내에 8개의 기초치의학과 9개의 임상치의학 등 17개학 교실로 전문화되어 있다(『서울대학교 요람』, 1995-1996 참조).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축적된 지식의 양이 많을수록 이를 습득하고 숙달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 및 훈련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학력의 향상이 반드시 이와 같은 선행조건이 충족된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과잉교육열과 학력주의 사회의 분위기는 상급교육기관으로의 맹목적 진학을 부추기는 면도 무시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말하자면 학력인플레현상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과급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하여야 한다. 예컨대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만 갖추어도 충분히 해낼수 있는 직종에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업하는 경우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교육수준의 상승과 노동의 질적 변화와의 관계를 화이트 칼라근로자와 블루칼라 근로자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① 화이트칼라 근로자

일반적으로 정신노동자와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용어상 흔히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직업분류방식에 따르면, 전문직 및 전문기술직 종사자,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가 화이트칼라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 물론 화이트칼라 근로자도 내적으로 매우 다양하여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차이보다 때로는 화이트칼라의 내적 이질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연도별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1960년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대학교육을 일부 또는 전부 받은 사람의 비율이 23.2%에 불과하였으나 30년이 지난 1990년에 이르면 그 비율이 52.7%로 증가하고, 4년제 정규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도 42.5%에 달하고 있다.

1994년도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의 52.9%, 전문가의 80.6%,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29.1%, 사무직원의 23.9%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직업 분류방식과 조사대상이 달라 <표 5>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1990년 이후의 변화를 읽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일부의 화이트칼라 직종에서의 온라인전산화를 포함한 사무자동화는 때로 직무를 단순화 내지는 표준화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노동시간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특히 은행이나 보험기업 등의 창구업무에서는 탈숙련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김진영, 1994).

(6) 예컨대, 수의사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4년간의 교육기간으로 충족되었으나 최근에 앞으로는 교육기간을 6년으로 늘려서 이수하도록 결정된 바 있다.

〈표 5〉 연도별 전문·기술·행정·관리·사무직 종사자의 교육수준
(단위: %)

교육수준 연도	불 취학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초급 대학	대학 이상	계
1960 ¹⁾	4.7	19.7	15.6	36.5	23.2		100.0 ²⁾ (438,205)
1970	0.8	8.5		50.7		40.0	100.0 (1,012,046)
1980	0.4	3.5		56.9		39.3	100.0 (1,917,666)
1990	0.2	1.4	3.9	41.8	10.2	42.5	100.0 (3,911,275)

주: 1) 각급 학교에는 중퇴자를 포함시킴.

2) 미상자 0.3%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통계청, 『인구및주택센서스 보고서』, 각년도.

〈표 6〉 연도별 생산·운수장비운전사·단순노무자의 교육수준
(단위: %)

교육수준 연도	불 취학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초급 대학	대학 이상	계
1960 ¹⁾	26.2	53.9	11.6	6.9	1.1		100.0 ²⁾ (926,435)
1970	9.0	48.1		39.9		3.0	100.0 (2,197,775)
1980	3.8	34.6		59.3		2.2	100.0 (3,569,686)
1990	2.1	16.1	28.8	47.3	2.8	2.9	100.0 (4,954,618)

주: 1) 각급 학교에는 중퇴자를 포함시킴.

2) 미상자 0.3%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통계청, 『인구및주택센서스 보고서』, 각년도.

② 블루칼라 근로자

생산직 종사자, 운수장비운전사, 단순노무자 등 블루칼라근로자로 분류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1960년도에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가 80%를 상회하였지만 30년 후인 1990년에 이르러서는 18%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 1960년에는 불과 8%에 머물렀으나 1990년에는 53%에 이르고 있다(〈표 6〉). 1960년에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60%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블루칼라 근로자의 교육수준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블루칼라 근로자 내에서도 직종에 따라 학력수준은 상이하다. 1994년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는 기능원 및 기능근

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은 4할 정도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단순직 근로자는 6할 이상이 그려함으로써 동일한 범주속에 포함되는 블루칼라 근로자라 하더라도 내적으로는 상이한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노동부, 1995). 새로이 분류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범주에는 구 분류에서 서비스직 종사자와 농업종사자로 분류되었던 일부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 분류에서 사무직 종사자,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농어업종사자에 포함되었던 단순노무자를 통합하고 있다.⁽⁷⁾

3. 직업의식과 직업윤리의 변화

1) 직업가치와 직업관

지난 30~40년 동안 직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직업윤리와 직업관도 크게 변화하였다. 직무에 대한 태도에서 큰 변화를 본다. 소위 3D 직종으로 일컬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직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크게 부각되어 직종간의 인력의 편중현상을 가져오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직종에는 근로자를 쉽게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원하더라도 이들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다. 1980년대말 이래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설동훈, 1996). 3D 직종 기피현상은 결과적으로 남성직종에 대한 여성인력의 참여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손봉숙 외, 1995).

또한 직무에 대한 선호의 경향도 달라졌다. 19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해외근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해외진출이 활발하였던 1970년대에는 해외근무가 많은 젊은 이들에게는 꿈을 펼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던 시기에 우리가 진출하는 세계는 모두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로서 해외근무가 선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경제는 여러 나라를 앞질러가기 시작하였다. 이제 대기업에서도 해외근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서 근로자들이 가졌던 일 중심의 의식에서도 점차 변화가 나타났다.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조사자료를 살펴보면 1967년도에는 “여가보다 일할 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진술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동의하였으나(김경동,

(7) 구 분류 사무직종사자인 표 수집원과 문서송달인, 판매종사자인 행상인과 신문 팔이, 서비스직 종사자인 가정부, 객실종사원, 호텔포터, 건물관리인, 청소원, 창문청소원 및 경비원, 그리고 농·축·수산업종사자인 목동과 농업노동자가 신분류에서는 모두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통합되었다(통계청, 1992).

1979), 20년이 지난 1989년도의 자료는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진술에 28%가 그리고 “무리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다소 적게 벌더라도 생활을 즐길 필요가 있다”에 72%가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90). 질문하는 방식과 대상에 따라 응답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960년대의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비해 볼 때 198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는 일에 대한 근로자들의 몰입도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근무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토요일 근무를 휴무 또는 격주제 휴무를 한다든가, 일과시간을 앞당겨 시작하고 조기에 종료함으로써 저녁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는 在宅 근무의 형태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8)

2) 직업위신

직업적 가치의 변화는 직업위신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직업위신에 대한 평가는 사회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앞에서 시사한 바대로 과거에 선망의 대상이 되던 직업이 더 이상 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크게 평가되지 못하던 직업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 위치와 중요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해방 이후 50년 동안 상대적 위치가 낮아진 직업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들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진출하게 되는 직업 중 교원은 매우 낮은 편이다. 1962년에 실시된 사회조사의 결과는 초등학교 교사가 신문기자나 회사원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음을 보여주었으나(이상백·김채윤, 1966), 1978년도의 조사자료에서는 교사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낮아져서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사도 이들보다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차경수, 1983). 그러나 1990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의 직업평가점수는 신문기자보다는 낮지만 은행 대리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홍두승, 1992).

직업적 위신이 높은 직업을 반드시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호되는 직업의 위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1960-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위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던 많은 직업군들이 이제 그 위치를 확보하면서 하나의 전문직업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본다.

1994년말에 경향신문사가 신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세대들은 21세기에 가장 유망한 직종으로 전자, 컴퓨터 관련 업종을 꼽

(8) 「한국일보」, 1996년 7월 12일자.

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격증 있는 전문직, 디자인, 광고이벤트, 서비스업, 매스컴 관련직 등을 꼽고 있다(조용수 1996: 189-190에서 재인용). 이것은 새로운 세대의 직업관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1950-60년대에 가치가 주어졌던 직업이 1980-90년대 들어서서 더 이상 그러하지 않은 경우를 자주 본다. 흔히 신세대라 일컬어지는 세대의 직업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다르다(조용수, 1996 참조). 한국여성개발원은 1990년대 여성의 유망직종 1순위로 전기 및 전자기술직, 기계 기술직, 저작 및 언론분야, 2순위로 컴퓨터 관련직, 경영 컨설턴트, 회계 세무직, 상업미술 및 도안직, 스포츠, 레저분야 감독직,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의 제도업무직, 보험, 부동산 및 증권분야 등을 열거하고 있다(손봉숙 외, 1995: 153-154에서 재인용).

직업적 위신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 보상이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직업적 위신이란 그 사회 성원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것 이기는 하지만 그 평가의 이면에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삶의 기회와 삶의 양식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문직에 대한 선호는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자격증을 수반한 전문직이란 일반적으로 직업의 안정성과 고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보여졌던 관직에의 선호는 약화되었지만 전문 법조인에 대한 선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선망도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매년 치루어지는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의 진학희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세대에 있어서는 그 대상과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둘 필요가 있다. 과거에 비해 개성이 강조되고 존중되고 있다.

해방 이후 50년이 흐르는 동안 직업과 관련된 권위구조도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직업과 직종의 구분이 '신분' 상의 구획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직무상의 위계구조가 더 이상 신분상의 위계구조를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전통적인 '신분관계'가 소멸되어가면서 근대적인 '계약관계'의 의미가 더욱 강조된 것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지고 작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과거 위계구조에서 열세에 처해 있었던 층의 비중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온 탈권위주의 추세의 반영이기도 하다.

산업현장에서 높아진 근로자의 위상을 보면 우선 근로자의 대표가 노사협상의 자리에서는 경영진의 대표와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회사의 위계에서 관리자와 근로자로 자리매김이 이루어지지만 근로자의 노동권은

사용자의 경영권과 마찬가지의 중요한 권리로 점차 인정받게 된 셈이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리가 만족스러울 만큼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나 경영권에까지 도전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직종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예컨대, '간호원'이라는 호칭으로 의사의 보조적 역할로만 그 활동이 국한되어졌던 간호(nursing)의 분야가 이제는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받으며 그 명칭도 '간호사'로 바뀌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으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키게 되었다.⁽⁹⁾ 또한 고도의 첨단 기술과 창의력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직급과 직책에 관계없이 높은 경제적 보상으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본다. 컴퓨터 관련, 증권이나 先物 등 금융관련, 그리고 영업관련 분야에서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전문인도 나타나게 되었다.⁽¹⁰⁾

4. 소결

지금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직업구조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변화보다는 향후 반세기 동안의 변화의 폭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왔던 직업의 의미와 직업에 대한 의식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지난 50년간의 변화의 궤적을 선형적으로 단순 외연시켜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은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는 타당치 않을 수도 있다.

직업에 대한 가치부여와 평가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잣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보게 된다.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 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해나가느냐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개성(個性)을 존중하면서 스스로의 일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직업적 위신과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9) 1974년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직업의 소분류에서 '직업간호원 (professional nurses)'으로 명명되었으나 1992년도에는 '간호 준전문가 (nursing associate professionals)'로 개칭되었다.

(10) 지금은 모 자동차회사의 일선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어느 관리직 사원은 영업직 사원이었던 1989년도에 월급 및 판매수당을 합쳐 총 1억여 원의 연봉을 받았다. 관리직으로 전환한 이후 월급이 크게 낮아졌음을 밝히고 있다(중앙일보, 1996년 6월 26일자 31면). 또한 모 생명보험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어느 여성 보험설계사는 1995년도에 과세표준 연봉을 3억 4천 9백만 원을 받아 이중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40여만 명의 보험설계사 중 최고의 소득을 기록한 바 있다(조선일보, 1996년 7월 13일자 11면).

IV. 노동통계의 변천과 전망

1. 사회학과 노동통계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노동통계는 우리나라의 지정노동통계 중에서 가장 먼저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택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구조사에 의한 노동통계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한국의 노동력을 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로 재정경제원 산하의 통계청이 매월 실시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인력수급정책과 노동정책을 수행해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 목적이외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노동통계로서 노동력의 구성분포, 이동, 실업기간, 실업이유, 구직활동, 연령, 계층,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등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학에서 노동통계를 활용한 연구는 아직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인구학이 인구통계의 분석을 기초로 많은 연구결과를 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주로 거시적인 차원의 노동통계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취업률, 실업률 등을 주된 관심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나, 고용의 질, 실업에서의 구직행위 등의 미시적인 차원의 자료는 취약한 편이어서 사회학적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용구조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 통계 역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점차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력의 양적인 파악 이외에도 질적인 파악이 중요해지고 있다(경제활동인구조사개편연구회, 1996). 따라서 노동력 연구에 노동통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노동통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먼저 사회학이 노동통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면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변천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해방이후 노동통계의 개념과 조사방법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몇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에 부합되는 노동통계로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노동통계와 경제활동인구조사

1)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

한국의 노동력에 관한 정부의 지정통계에는 크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있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재정경제원 산하의 통계청이 담당해 왔으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노동부가 담당해 왔다. 가구조사에는 196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매월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198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고용구조조사, 인구센서스와 함께 5년마다 선정된 표본에 한하여 실시하는 경제활동특별조사가 있다. 중요한 사업체조사에는 매월노동통계조사, 사업체 노동실태조사, 임금구조조사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1968년에 정부의 지정통계로 시작됐다(여수봉, 1994).

가구조사는 국민 전체의 노동력과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실업률과 같은 거시경제적 지표를 알아내기 위해 자주 사용됐다.(11) 또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이 잠재적 노동력의 실태와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사업체나 조직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노동력 실태를 파악하는데 적절하다. 그러나 가구조사는 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노동자들의 임금, 근무기간, 경력, 기업의 복지상태, 노동조합활동 등 작업장 주변의 환경과 일에 대한 보상을 측정하기에는 가구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업체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가구조사는 노동공급의 측면을, 사업체조사는 노동수요의 측면을 조사함으로써 노동력실태를 파악하는데 상호보완의 역할을 한다.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내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에서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실시하는 표본조사로서, 취업, 실업, 노동력 등 우리나라 인구의 경제활동에 관한 특성을 26개의 항목을 통해 조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11) 실업률을 파악하는 다른 방법은 실업보험을 지급하는 기관을 통하는 것이다. 이런 조사방법은 행정조직망이 잘 발달되어있으며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실업보험을 지급 받고 있는 국가에서 주로 사용한다. 예로 독일과 스웨덴은 실업보험을 지급 받는다고 등록하는 수를 공식 실업통계로 하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지만 영국은 노동력조사가 공식통계이며 프랑스는 실업보험등록자수가 공식통계이다.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측정하여 제공하고 고용창출, 직업훈련, 소득증진 등을 위한 정부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통계청, 1995: 7).

이 목적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현재상태접근법(노동력접근법)에 의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ILO와 OECD가 국제간의 비교를 위하여 권장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월의 15일을 포함한 주 일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현재상태로 파악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한 인구로 파악하여 조사대상으로 한다. 생산가능한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사람이다. 실업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은 하지 못하였으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 가능한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개념적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는 먼저 취업상태를 파악하고 비취업자에 대해 구직활동여부를 확인하여 실업상태를 파악한 후에 비경제활동인구는 남는 범주로 파악한다. 취업자는 개념적으로는 지난 1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82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일을 한 것으로 규정”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ILO, 1983).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질문의 흐름에 의하면 취업자는 ① 지난 1주간에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 ② 지난주에 질병, 휴가, 노동쟁의, 조업중단으로 일시휴직 중인 사람과 ③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¹²⁾로 구성되어 있다.

실업에 대한 개념적 규정은 ILO의 권고를 따라 3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 시켜야 한다. 세 가지 기준은 ‘일을 하지 않았고’, ‘일할 수 있었으며’, ‘일 거리를 찾았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는 여러 단계의 걸름질문(filtering questions)을 거쳐 규정된다. 질문의 흐름에 의하면 실업자란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없는 사람들’과 ‘18시간 미만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들’ 가운데 일시휴직자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지난주에 일자리를 구해보았거나’ 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해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비경제활동에 속하는 사람들은 실업에 대한 걸름질문에서 ‘지난주에 일자리

(12) 무급가족종사자란 자신에게는 직접적으로 수입이 없더라도 가구(가족)단위에서 경영하는 일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운 사람을 칭한다(통계청, 1995).

를 구해본 적이 없다'거나 '일자리가 있었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질문의 흐름을 따르면 먼저 취업자를 선별해내고, 다음으로 실업자를 선별해낸 다음 남는 사람들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게 된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매월 통계를 집계하여 매 분기마다 공표하고 있다. 여러 통계치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실업률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적 지표로서 GNP, GDP 등과 함께 국가의 경기변동을 파악하는 도구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62년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시작될 때 4.6%를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아가 현재는 약 2%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3.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변천

1) 변천의 흐름

해방 이후 1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력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노동력조사는 1957년 1월부터 내무부 통계국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조사는 그 당시에 생산 가능한 인구로 간주되던 만 14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4,400가구를 표본추출 하였다. 실제 조사는 지방행정기관을 통해 행정통계의 일부로 매월 실시했다. 그러나 노동력조사의 조사방법은 지방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실시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표본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1962년 1월에 발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수행을 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1962년 5월에 노동력조사를 중단하고, 1962년 6월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라는 새로운 노동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¹³⁾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당시 새로 제정된 통계법(1962년 1월 15일 제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지정통계 제4호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조사 자체는 61년 7월에 설립된 경제기획원 산하의 조사통계국이 담당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노동력조사가 매월 실시하던 것과는 달리 분기별로 3

(13) 통계청이 1994년에 발간한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196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62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발간한 『경제활동인구조사 — 조사원의 벗』과 1973년에 발간한 『인구동태 표본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지침』을 참조하면 1962년 6월부터 실시한 것이 정확하다.

월, 6월, 9월, 12월에 실시하였다. 조사의 대상기간은 조사시기로 결정된 달의 최종 일주일을 포함한 지난 3개월 동안(조사기간)이었다. 노동력조사에서의 문제였던 표본과 조사방법을 개편하여, 표본은 1960년의 인구센서스에 근거를 두고 단계별 충화추출법을 사용하여 추출했으며, 조사에서는 전문조사원에 의한 조사방법을 도입하였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4,400가구에 상주하는 14세 이상의 사람들(14세 이상 인구의 약 1/1,000 정도)이었다. 조사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의 문항을 질문하고 응답을 기재하는 타계식(他計式)으로 이루어졌으며, 가구에 관한 사항이나 취업시간에 관한 조사는 미리 용지를 배포하여 가구원이 기입하는 자계식(自計式)으로 이루어졌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첫 번째 개편은 이 조사가 시작된지 8개월 만인 1963년에 있었다. 이때의 개편은 평상상태접근법을 조사표에서 삭제하는 것이었으며, 이 개편으로 현재와 같은 조사표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¹⁴⁾ 다음의 대폭적인 개편은 1969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조사통계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가구조사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1966년의 인구센서스⁽¹⁵⁾를 바탕으로 다목적 표본을 만들고 표본설계를 대폭 변경하였다. 이러한 표본설계의 원칙은 그 이후 계속 유지되어, 매 5년마다 인구센서스를 토대로 표본이 개편되고 있다. 두 번째의 대폭적인 개편은 1982년에 있었다. 이때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조사하던 것을 매 월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다음의 큰 개혁은 1987년 1월에 있었다. 중학교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이전까지 생산가능한 인구에 포함됐던 만 14세 연령층의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생산가능한 나이를 상향 조정하여 조사대상을 만 1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2) 표본과 조사방법의 변천

① 표본크기의 증가

조사대상가구(표본가구)수는 대략 인구의 1/1000 수준에 맞춰 약 4,400가구, 1963년에 약 4,500가구, 1966년에는 약 5,000가구, 1967년에는 약 5,200가구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1968년에는 1/500에 해당하는 11,000가구로 크게 늘었다.⁽¹⁶⁾ 조사통계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외에도 도시가계조

(14) 평상상태접근법에 관한 설명은 뒤의 「노동력에 대한 접근법과 개념의 변천」을 참조하기 바람.

(15)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가 1965년이 아닌 1966년에 있었던 것은 예산 때문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16) 여기에 제시된 표본가구수는 각 년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 조사지침서』를 참조한 것이다. 통계청이 1994년에 발간한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에서

사나 인구동태조사 등의 가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사들이 별도로 표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었으며 조사구나 조사원의 관리가 수월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은 1969년에 여러 조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표본으로 표본설계를 개편하였다. 새로운 표본은 약 5,600 표본가구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1968년 이전의 1/1,000 수준으로 표본추출률을 환원시킨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급속히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표본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이동에 맞춰 표본을 개편해야 한다. 따라서, 통계청은 다목적 표본설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의 결과에 근거한 새로운 표집틀을 사용하여 인구센서스년도로부터 2~3년 후에 표본을 개편해왔다. 1972년의 1차 표본개편에서는 추출률 1/500에 해당되는 약 12,000가구를 표본으로 하였고, 1977년의 2차 표본개편에서는 추출률을 1/349로 확대하여 표본규모를 21,000가구로 하였으며, 1982년의 3차 개편에서는 추출률을 다시 1/547로 환원하여 조사대상 가구수는 15,500가구가 되었다. 1982년 2월에는 신구표본에 대한 병행조사를 실시했다.

1988년에는 지역별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수행을 위한 지역별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크게 늘었다. 이를 위하여 4차 표본개편에서는 추출률을 1/306로, 표본규모를 32,500가구로 하여 전국뿐만 아니라 시·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제시가 가능해졌다. 1993년의 5차 표본개편에서는 월 평균 조사가구수를 32,490가구로 하였으며, 현재 표본의 크기는 약 34,000가구이다.

② 조사방법의 변화

지난 30여년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기간을 15일이 포함된 주를 조사대상기간(조사주간)으로, 실제 조사기간은 조사주간의 다음 주 일주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은 분기별 조사 때부터 시행되어 적어도 1968년 조사부터는 15일이 포함된 3, 6, 9, 12월의 주가 조사주간으로 명시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명문화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이런 원칙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담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본 조사표에 직접 기입하는 타계식 조사, 응답자가 보조조사표를 자계식으로 기입하는 조사방법 등은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조사표의 구성이 1981년까지는 한 조사표에 모든 가구원의 사항을 기재하던 연기식이었다. 한편, 1982년은 분기별 조사를 월

이 기간에 표본크기는 평균 5,100가구(추출률 1/1,000)라고 기술하고 있어 이 글의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다.

별 조사로 바꾼 해이다. 이때 처음으로 OMR용 조사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조사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분기별 조사 월인 3, 6, 9, 12월에만 OMR조사표를 사용했으며, 나머지 달에는 보통의 조사표를 사용했다. 이때 OMR조사표는 각 가구원마다 개별적 조사표를 사용하는 단기식을, 보통 조사표는 종전대로 연기식을 택해 두가지 조사를 병행했다. 또한 OMR조사표에서는 27항목을 조사하고, 나머지 달에는 일부 기본항목만을 조사하였다. 이 방식의 조사는 1985년에 조사표를 단기식으로 전면 개편하기까지 3년간 유지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방법은 1985년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3) 노동력에 대한 접근법과 개념의 변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의 주된 대상인 취업, 실업, 노동력의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실시 초기에 크게 변한 것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지난 30여 년간의 조사를 통해 애매하거나 혼돈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수정·보완되어 왔다. 조사 항목은 1962년 당시 19개 항목에서 몇 차례에 걸쳐 몇 가지 항목이 추가 혹은 삭제되는 과정을 거쳤다. 조사항목수는 1962년부터 1979년까지는 15개에서 19개사이, 1980년에는 25개, 1983년에는 27개로 바뀌어져 왔으며, 1985년에 26개의 항목으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80년 이후에 추가된 항목은 취업가능성 여부, 취업의사 유무, 평상시 취업시간, 실업동기, 원하는 일의 형태, 비구직 이유, 6개월 동안의 구직여부 등이다.

① 현재상태접근법과 평상상태접근법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첫번째 개편인 1963년의 개편은 조사표 내용에 대한 개편이었다. 그 이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현재상태접근법과 평상상태접근법을 함께 사용하였으나 이때부터는 현재상태접근법 만에 의한 조사로 전환하였다. 현재상태접근법은 조사시점에서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것이고, 평상상태접근법은 조사시점까지의 어느 정도 긴 기간동안에 있어온 평상적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두 접근법은 통상 조사대상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현재상태접근법은 1주일이나 하루와 같은 매우 짧은 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는 반면, 평상상태접근법은 통상 1년의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한다. 1962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이러한 기간에 대해 실제조사가 실시되는 주의 바로 앞 일주를 조사주간(調査週間)이라고 칭하고, 그 주를 포함한 이전 3개월을 조사기간(調查期間)이라고 불렀다.

평상상태접근법은 노동력이 계절이나 다른 원인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변하

는 경우에는 현재상태접근법에 비해 보다 대표성이 있는 노동력자료를 생산하게 한다. 반면에, 사람들이 안정된 형태로 별 변동 없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재상태접근법이 응답오류를 줄이는데 유리하다 (Hussmanns, Mehran and Verma, 1990). ILO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해 평상상태접근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안정된 경제성장 단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현재상태접근법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ILO는 평상상태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현재상태접근법을 병행하는 것도 권하고 있다.

<표 7>을 보면 농가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계절별로 변동이 많은 것에 의해 비농가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농가의 4/4분기의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 다른 분기에 비해 1.5배에서 2배 가량 높다. 이것은 겨울철에 농가가 휴식기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상태접근법이 갖는 문제의 한 예로 <표 7>에서 분기별조사가 실시되었던 1982년 이전과 매월조사로 바뀐 1985년의 농가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분기별 동향을 보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농가의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을 보면 1985년에는 4/4분기에 비해 1/4분기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지만, 1966년과 1975년에는 1/4분기에 비해 4/4분기가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전에 분기별로 조사하던 것을 1982년부터는 매월 조사하여 3개월의 평균을 분기별로 보고한 때문이다. 즉, 1982년 이전에는 1/4분기의 경제활동상태는 봄철인 3월 15일을 포함한 일주일 동안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했다. 따라서, 60년대와 70년대의 1/4분기의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12월에 조사하던 4/4분기의 비경제활동인구비율에 의해 월등히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1985년 조사에서는 1월이 농촌에서는 가장 할 일이 없는 달이기 때문에 1, 2, 3월의 평균을 보고하는 1/4분기의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경향으로 비추어보면, 60년대와 70년대에 평상상태접근법으로 조사했었더라면 1, 2, 3월 3개월간의 평균적 의미로서 1/4분기의 농가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 나타났었을 것이며, 그 결과는 85년의 것과 비슷했을 것이다.

위의 예에 비추어 보면 생산가능한 인구 중에 농업인구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17) 평상상태접근법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1960년대와 70년

(17) <표 7>에 제시된 각 년도의 생산가능한 인구 중에서의 농가인구의 비율은 1966년에 55%, 1975년에 41%, 1985년에 22%, 1993년에 13%이다. 생산가능한 인구 중 농가 인구가 비농가 인구보다 적어지는 것은 1969년부터로 당시의 농가인구는 8,224천명, 비농가인구는 8,628천명으로 농가인구의 비율이 49%였다. 참고로 1968년을 보면 농가인구는 8,389천명, 비농가인구는 8,067천명으로 농가인구의 비율이 51%였다.

〈표 7〉 농가와 비농가의 분기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

	농가				비농가			
	1966	1975	1985	1993	1966	1975	1985	1993
1/4분기	44	36	53	40	46	45	47	42
2/4분기	23	20	28	23	45	45	44	40
3/4분기	36	27	30	23	47	47	45	40
4/4분기	58	56	39	27	50	48	45	4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대 초에는 평상상태접근법에 의한 노동력 조사가 보다 타당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며, 적어도 평상상태접근법과 현재상태접근법을 함께 사용했었더라면 보다 타당한 자료를 확보했을 듯 하다. 또한 농가인구비율에 비추어 농가인구가 25% 아래로 떨어지는 1980년대 초가 현재상태접근법을 도입하는 적절했던 시기였을 듯하다.

② 개념의 변천

1962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요」라는 절에서 경제활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재화(물품)라든가 용역(아쉬움)을 생산 또는 제공하고 수입을 얻어 「들이」는 일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소비 또는 구득하는 생활을 꾸준히 계속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활동이 경제활동이다”(통계청, 1962: 2). 이것은 취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개념의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침서는 “경제활동은 … 우리나라 인구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경제활동인구)는 얼마나 되며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가「졌스면」서도 참가하지 못한 사람(실업자)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 통계자료를 모집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묵시적으로 생산 가능한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로 구분하는 것으로 평상상태접근법을 사용하는 노동력조사에서 생산가능한 인구를 평상시에 일을 하는 유업자와 일을 하지 않는 무업자로 구분하는 분류와 유사하다.

한편, 같은 지침서에서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기술과는 조금 다르며 현재상태접근법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개념적 분류표가 소개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1967년의 지침서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초기에 다른 두 가지 접근법과 개념적 규정이 한 지침서에 동시에 기술된 것은 경제활동,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에 대한 개념적 정립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던 때문인 것 같다.

당시의 현재상태접근법에 의한 경제활동인구의 정의는 ILO가 권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만 14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가능한 인구로 하여 이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하였다. 취업자는 종사자와 일시휴직자로 구분되고, 종사자는 다시 정상종사자와 비정상종사자로 구분하였다. 비정상종사자는 '주로 가사', '주로 학습', '주로 기타'로 구분하였다. 한편 실업자는 구직자와 비구직자로 구분하였으며, 비구직자는 일기불순, 대기, 일시적 병, 구직단념, 기타 사유에 의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이후 이러한 개념은 일부 용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변경된 용어의 한 예를 보면, 1960년대에는 취업자를 정상 종사자, 비정상 종사자로 구분하였던 것이, 1970년대 초에 정상 취업자, 비정상 취업자라는 용어로 바뀌었다가, 다시 1970년대 말에 정상, 비정상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취업 중인 자로 바뀌었다.⁽¹⁸⁾ 취업자 중 가족종사자에 대한 기준을 1976년에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규정했으며, 1980년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 중 봉급생활자의 명칭만 변경하여 상용고, 임시고, 일고로 칭하던 것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

4. 현재고용구조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력 실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설계는 많이 바뀌었으나 조사표나 조사방법 등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1987년 이후에는 이렇다할 변경사항이 없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조사표와 조사주기 및 조사방법을 변경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학계의 요구로 학자들이 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한 노동력과 고용에 관한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노동력 통계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¹⁹⁾ 경제활동인구조사개편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고용형태의 다양화, 고용의 질, 노동력 수급, 실업 및 불완전취업,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등이 있다(경제활동인구조사개편연구회, 1996). 이 글에서는 현재 가장 중요하

(18) 1973년과 1978년의 『인구동태 표본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지침』 참조.

(19)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개편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유사한 미국의 경상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가 1994년에 조사표와 조사방법을 대폭 개편한 것에 자극을 받은 바도 없지 않다.

다고 여겨지는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실업, 비경제활동, 불완전 취업만을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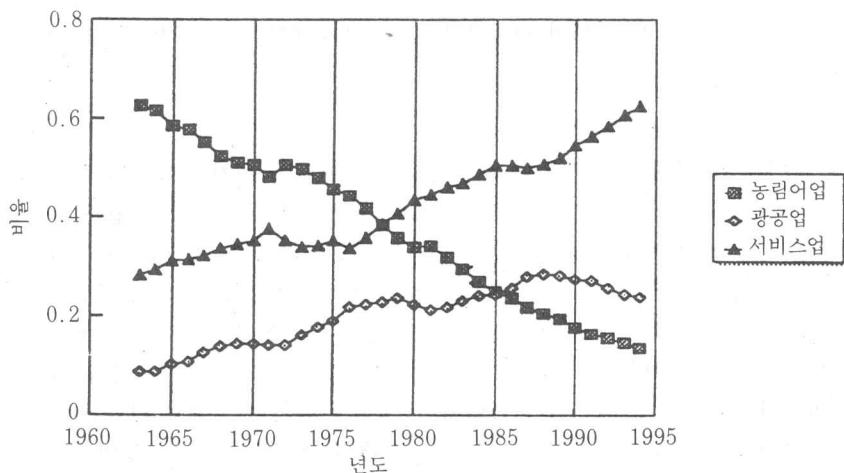
1) 다양한 고용형태의 문제

먼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고용의 형태는 종사상의 지위로 구분되는 고용주,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파악된다. 자영업자는 “자기 스스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상용근로자는 “임금 및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임시근로자는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 1개월 이상인 자”,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 또는 일정한 설비가 없이 단순한 노동으로 집안이나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통계청, 1995).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서비스업의 증가와 함께 불규칙적이며 비공식적인 고용이 증가하면서 위의 분류로는 구분되기 어려운 형태의 노동이 많아지고 있다. 조윤성(1987)은 이미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제조업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왔으나, 80년 중반 이후에는 서비스업, 특히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림 1>은 1963년부터 1993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인구구성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88년을 기점으로 광공업의 비율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건설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였다. 1993년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임업을 제외한 전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총취업인구의 28%,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71%이다. 서비스업을 다시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로 나누어 보면 총취업인구의 10%가 건설업에, 29%가 도·소매업에, 32%가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20)

서비스업, 특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증가는 비공식적이며 불안정한 고용관계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사업체조사와 가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사업체조사인 매월노동통계조사의 1993년 산업분류별 상용근로자의 추이를 보면 제조업 근로자가 비농가 모든 산업 근로자의 50%, 건설업 근로자는 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9%, 운

(20) 제조업이 광공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비스업은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가 대략 1:3:3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1>에서 도·소매업 대신에 서비스업으로 제시한 것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자료에는 서비스업이 건설업과 기타로 구성돼있어서 도·소매업에 관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림 1〉 산업별 취업자 비율, 1963~1993

송·금융·기타 서비스업이 26%이다. 즉, 사업체조사인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는 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제조업 근로자 비율이 2배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서비스업 근로자 비율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21) 두 조사의 이러한 차이는 사업체조사에서는 정규직원이 조사되는 관계로 서비스업과 같이 고용이 비공식적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용이 비공식적이거나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종사상의 지위로 분류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종사상의 지위는 실제로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한 분류이다. 하나의 기준은 임금근로자이냐 자영근로자이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근로자일 경우 계약기간이 얼마나 긴가 하는 것이다.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계약기간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데 반해 비정규직의 종업원이나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종사상의 지위는 적절한 응답의 선택이 없기 때문에 조사원의 판단에 의해 정해질 위험이 있다. 보다 객관적인 자료 획득을 위해서는 임금근로를 계약기간만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분류가 필요하다.(22) 또한, 종사상의 지위에 대한 문항을 두 개의 기

(21) 사업체조사에서도 제조업 근로자의 비율은 80년대에 들어서서 줄어들었으며 서비스업 근로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2) 이런 종류의 고용으로는 정규사원 외에도 파견근로자, 파트타임, 임시·임용, 계약·등록사원 등이 있다.

준에 의거하여 두 개의 질문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23)

2) 실업, 비경제활동, 불완전 취업, 구직단념자의 문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 몇 개월 동안은 2% 이하로 떨어지는 달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 정도의 실업은 마찰 실업을 감안하면 완전고용상태이며 실제로는 노동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는 완전고용상태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물론 실업과 완전고용이라는 경제학적 정의에 의하면 계량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재상태접근법에 의한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측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그 경계의 모호함 때문에 상식적으로 실업으로 파악되어야 할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것은 특히 보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된 반면 전반적인 고용불안정이 증대되어 파트타임노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한다(조우현, 1985).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가끔 돈을 벌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선배의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하자. 이 사람은 직장을 찾아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조사주간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과연 직장을 가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은 적극적 구직활동인가 아닌가? 만약 학원 강사가 직장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가? 이 경우는 현재상태접근법의 적극적 구직활동이라는 개념 규정이 조작적 편의를 위해 구직 '활동'을 강조한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한편 취업으로 파악되어야 할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하는 일이 공식적인 경우에 보다 빈번하다. 예를 들어 가사일을 돌보며 가끔 파트타임으로 부탁에 의해 방송용 스크립트를 쓰는 주부가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스크립트를 쓰지 않는 주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조사주간에 스크립트를 쓰지 않았다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해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된다.(24)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러한 형태의 취업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다면 취업자로 파악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특히 이런 형태의 노동은 시간당 임금이 높은 전문기술직에서 시간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최근 이런 종류의 노동이 프리랜서(freelancer)라는 이름으로 증가하고 있다.

(23) 종사상의 지위에 관한 질문은 경제활동인구조사표의 라-3 문항이다.

(24) 이것을 확률로 보자. 일감이 일정률로 이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조사주간은 1주이며 한 달은 4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취업자로 파악될 가능성은 1/4이며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될 가능성은 3/4이다.

이런 예들은 현재상태접근법이 비경제활동인구를 분류의 나머지 영역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취업의 규정에서도 제외되고 실업의 규정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에게도 평상시 취업시간을 물을 수도 있으며, 고용의 형태를 다양하게 질문 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개의 파트타임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지를 물을 수도 있다. 만약 다양한 질문이 매월조사에 타당하지 않다면 매년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특별조사에서 현재상태접근법과 함께 평상상태접근법에 의거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ILO, 1983).

또 다른 형태의 문제는 불완전취업(underemployment)과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s)이다. 불완전 취업이란 실제로는 취업을 하고 있으나 일 하는 시간 수가 적거나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로는 일거리가 모자라지만 조사에서는 완전한 취업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상태접근법에서는 조사주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하면 취업으로 보고 실업은 일거리가 없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 만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Hussmanns, Mehran and Verma, 1990).

구직단념자는 일할 의사 있는이나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구직활동을 단념한 것이다. 이런 이유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무도 자신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구직단념자는 현재상태접근법에 의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되나 실업의 성격이 강한 경우이다 (Hussmanns, Mehran and Verma, 1990). 이런 현상은 젊은층, 노인층, 여성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최근에 들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의지가 증가하고,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증진되었기 때문에 직장을 갖으려 하나 이 과정에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25) 또한 구직단념은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들이 처음으로 직장을 찾게 되면서 자신이 의도하는 의중임금(reservation wage)보다 실제 임금이 낮은 것을 알고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기환(1995)은 1983년, 1986년, 1989년, 1992년의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주당 36시간 미만 일을 한 취업자를 불완전 취업자로 봤을 경우 우리나라의 불완전 취업자는 생산가능한 인구의 8.7%, 5.6%.

(25) 김훈과 황석만(1995)이 88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구직 활동을 단념하는 이유는 '가사·육아와 병행이 힘들어서' (29.4%), '원하는 일 자리가 없어서' (28.1%),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17.1%), '배우자가 반대'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6.2%, 5.4%로 감소해 왔다. 이와 함께 실업자는 각 연도별로 생산가능한 인구의 2.1%, 1.9%, 1.6%, 1.5%로 감소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실업 뿐만 아니라 불완전 취업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 불완전 취업은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

한편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의 경우는 실업이나 불완전취업과 변화의 추이가 조금 다르다. 구직단념자를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으나 구직활동을 단념한 사람'으로 규정하면,(26) 각 연도별로 구직단념자는 6.2%, 5.2%, 5.6%, 6.6%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여자의 경우 1983년에는 9.4%이며 1992년에는 10.1%에 이른다. 최근에 들어 대졸여성의 취업의사가 증가하면서 졸업 후에 구직단념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 3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대 초반 여성 중에서 구직단념자는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실업률이 낮고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할 의사는 있으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을 활용하는 것은 노동력수급의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것보다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또한 여성 대졸자의 취업의사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취업을 중심으로 대학교육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고용과 노동, 이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이유 등을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매월조사에서 상세히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면 특별 조사의 형식으로 1년에 한 번 조사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5. 소결

이 글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변천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실업, 비경제활동의 구조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변천을 보면 지난 30여년 동안 표본개편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노동력에 대한 개념적 변화나 질문내용 및 질문형식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노동력의 질적인 면을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종사상의 지위에 의한 구분이다. 첫째, 조사표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항목이기 때문에 두 개의 문항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서비스업의 증가에 따라 고용

(26) 이 정의는 민경희(1986)의 것을 따른 것으로, 고용구조조사에서는 문항 61에서 64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문항 다-1, 다-2, 다-3이 해당되는 사람들이이다.

형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현재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종사상의 지위에 대한 분류를 필요로 한다.

개선이 필요한 다른 부분은 실업, 불완전취업, 비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의 구분에 있다. 이는 현재상태접근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근본적인 개념의 개선보다는 질문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매월조사에서 다양한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면 매년특별조사의 형식으로 상세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평상상태접근법에 의한 조사도 현재상태접근법에 의한 조사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방안들 이외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편을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사례의 개발이나 보다 정확히 응답할 수 있는 질문지의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 사례 연구나 질문지 작성법은 사회학의 전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학자들은 경제활동인구조사개편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경제활동인구조사개편의 요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V. 노동운동 50년

1. 들어가며

한국 노동운동 50년을 제한된 지면에 조명한다는 것은 시도 자체가 무모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해방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사를 개괄적으로 나마 되돌아보는 것은 현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여기서는 해방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을 노동운동내의 보수적 경향과 진보적 경향간의 경쟁과 갈등의 다이내미즘, 즉 조직 경쟁(institutional competition)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개량주의적 혹은 조합주의적 노동운동으로 불리우는 ‘보수적’ 경향과 혁명주의적 혹은 급진주의적 노동운동으로 불리우는 ‘진보적’ 경향간의 갈등은 일찌기 자본주의적 발전을 경험했던 서구 국가의 노동운동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노동운동이 어떻게 보수와 진보의 변증법적 관계속에서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2. 한국 노동운동의 이념적 변천

1) 전평 중심의 좌익적 노동운동의 성장과 몰락, 1945-1948

해방 직후 한국의 정치상황은 좌익과 우익의 극심한 대결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당시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좌익적 사회운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일제시대에 시작된 노동운동은 일찌기 1920년대부터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조선노동공제회(1920년)’, ‘조선노농총동맹(1924년)’ 등의 조직으로 이어졌으며, 1929년에는 사업장 단위의 고립적인 투쟁을 넘어 지역차원의 연대투쟁으로 분출되었던 원산총파업에서 나타나듯이 좌익적 성격과 전투적인 투쟁성을 가지고 있었다(유현, 1990). 특히 30년대 일본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고 조선에 대한 무단통치가 거세어지자 노동운동은 지하로 잠복하여 비합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념적으로는 더욱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띠어 적색노조운동으로 불리게 되었다(김경일 외, 1995).

해방직후 한국 노동운동의 주된 흐름은 일제시대 노동운동에서 이어지는 사회주의 전통과 민족해방투쟁이 결합된 좌익적 노동운동이었다. 해방을 맞이하자 일제의 탄압을 피해 숨어 있던 다수의 좌익 노동운동가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시작하였고, 전국 각 지역에서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산별로 조직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마침내 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1945년 11월에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가 결성되었다. 전평은 이념적으로 맑스주의의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의 전통위에 기초하면서, 1,194개의 노동조합과 50만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였는데, 1930년대 비합법 노동운동의 대중적 기초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전국적 조직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27)

그러나 전평은 해방직후의 정치상황에서 노동운동조직으로서만 아니라 조선공산당의 대중조직화 기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의 극심한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격동에 결부되어 전평의 노동운동은 정치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좌우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좌익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게

(27) 해방직후 한국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전평이 소수 인텔리겐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노동운동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방이후 한국 노동운동 50년의 첫시기(1945-48년)를 전평을 중심으로 조명하는 것을 가능케 해 주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평이 가지고 있었던 대중적 지지는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의 연장선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열악한 노동대중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려는 일상투쟁에 주목했기 때문이다(김익진, 1985).

되었다. 전평은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이면서도 정당 외곽조직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평 주도하의 노동운동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동시에 부여받았다. 예를 들면, 전평은 조업재개를 촉구하는 해고 반대투쟁, 일본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퇴직금요구투쟁, 공장자주관리운동 등을 통해 노동자의 일상적인 권익을 위해 투쟁하였지만 궁극적 목적에서는 사회주의를 향한 정치적 지향성을 드러내었다. 특히 공장자주관리운동⁽²⁸⁾은 그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공장을 계속 가동시켜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증대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경제적 측면과 노동자에게 공장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정치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김경일외, 1995).

마침내 전평은 좌익에 대한 미군정의 정책이 ‘용인’에서 ‘배제’로 전환되는 46년 여름을 기점으로 미군정의 집중탄압을 받게 된다. 이에 전평은 1946년 9월 총파업, 1947년 3월 총파업 등의 ‘정치파업’을 통해 미군정이 장기화되고 우익정권이 등장하는 당시 상황을 타개코자 하였으나 오히려 조직의 혼란을 당하였고, 1948년에는 남한 단독총선거를 반대하는 5·8총파업을 벌였으나 이미 대세를 거스리기는 역부족의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평은 지나친 정치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중적 기반을 잃게 되었다.

한편 우익적 노동운동세력은 1946년 3월에 대한독립총성노동총연맹(이하, 대한노총)을 결성하였다. 결성 당시의 대한노총의 조직기반은 용산공작소, 경성철도공장, 경성전기 등 15개 직장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다. 대한노총은 노동조합이라기 보다는 우익정치인, 자본가계급, 미군정 등의 엄호하에 임금노동자가 아닌 지배계급에 의해 위로부터 결성되었으며 그들의 1차적 목표도 노동자들의 작업조건 개선이 아니라 반공투쟁과 반전평에 있었다. 즉 이 조직은 반공투쟁을 통해 전평중심의 좌익적 노동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공정치단체로서의 정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김낙중, 1982).

전평이 미군정의 탄압에 의해 마침내 와해되어 버린 상태에서 합법적 노동운동의 주도권은 대한노총이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노총은 노동자의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조직에 가까왔기 때문에 자체 내부에서 권력을 둘러싼 분열 파쟁을 심하게 벌였고, 궁극적으로는 이승만 대

(28) 공장자주관리운동은 다음의 두가지 형태를 갖는다. 첫째는 생산이 중단된 공장을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경영하여 자신의 생활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형태이며, 둘째는 매판자본가에 의해 경영되는 대규모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공장결정권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통령을 지지하는 친위조직으로 기능을 하였다.(29) 다시 말해 대한노총은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었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하기 보다는 노동자통제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어용화의 길을 걸어 나갔다.

2) 노사협조주의적 한국노총의 독점과 신노조주의 맹아의 형성, 1948-1987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은 이전까지 존재해 오던 좌우익의 갈등을 국토분단을 통해 처리하였다. 즉 좌익 세력이 휴전선 이북의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한 반면에, 한국에는 반공전선의 보루로서 더 이상 좌익이 존재하기 어려웠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노동운동의 대세를 형성해 오던 전평계열의 노동운동은 완전히 소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좌익계열의 전평이 와해된 후 1987년 이후의 신노조주의가 등장하기 까지의 40여년의 기간은 노사협조주의적인 노동운동의 독점시기였다. 이제 한국노동운동은 정부의 비호아래 결성된 대한노총 계열의 노사협조주의적 경향이 유일하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에 저항하는 신노조주의적 흐름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맹아는 정부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1970년대를 거치면서 짹이 트다가 마침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새로운 노조운동의 흐름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

1960년 4·19에 의한 정치사회적 상황의 변화는 1950년대 자유당 정권하에서의 우익적 노동운동에 억눌렸던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첫번째 계기였다. 4·19를 계기로 대한노총을 비호해 오던 정치세력이 붕괴되면서, 반공이데올로기의 억압이 다소 이완되고 혁신적인 정치운동이 활성화되는 등 노동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외적인 조건들이 조성되었다. 노동쟁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대한노총 중심의 어용노조에 대항하는 노조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고, 교원노조운동과 언론노조운동 등의 인텔리 중심의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새로운 노동운동의 짹은 더욱 탄압을 받게 된다. 모든 노동단체들은 해산되고 말았으며 군사정권에 의해 지명된 자들에 의해 조직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었다. 한국노총은 이전보다 더욱 어용화되어 결성 당시의 강령에서 반공체제의 강화, 산업부흥에의 이바지,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였다(한국노총, 1979). 그 과정을 보면, 5·16 군사정부는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쟁의를 일체 금지하고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 단체를 해체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수백 명의 노조간부 및

(29) 전평도, 대한노총과 마찬가지로, 조선공산당의 대중조직화 기구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측면에서 순수 노동자조직으로 보기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전평과 대한노총의 조직적 성격에서의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노동운동가를 구금하였다. 이어서 1961년 8월 5·16 정권이 지명한 9인의 ‘한국노동단체 재건조직 위원회’에 의해 위로부터 노동조합조직을 재편하였다. 그리하여 12개의 산별노조가 하향식으로 빠르게 결성되었고 전국 산별노조의 전국연맹체로서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결성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사협조주의를 주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위로부터 낙하산식으로 만들어진 산별노조체제를 통해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려는 군사정부의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한국노총에 반대하여 4·19 혁명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해 오던 세력들은 한국노총과 맞서 ‘한국노동조합연합회’를 서울-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하였으며, 이미 한국노총이 노조를 조직한 부문이나 기업에서는 ‘제2노조’를 결성하기도 하였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했다.⁽³⁰⁾

이러한 한국노총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에 대해 군사정부는 노조결성과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노동법개정을 1963년에 실시하였다. 노동법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제2노조를 사실상 불법화시켰으며 노조설립과 쟁의행위를 허가제로 바꾸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금지시켰다.⁽³¹⁾

1970년대에 들어 유신체제가 성립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유신체제 하의 노동법의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국가비상사태 아래에서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의 조정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였다. 뒤이어 유신헌법에서는 공무원, 공공부문의 노동자,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30) 권위주의체제에서는 국가가 자신들이 인가한 ‘공식노동조합’을 제외한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주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거나 급진적·전투적인 노동운동의 이념이나 노선을 가지고 있는 노동운동 세력은 자신들을 노동운동으로 조직화하지 못하고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틀 밖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식노조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노조보다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현재 복수노조금지조항에 의해 법외단체로 존재하는 민주노총의 경우 대표적인 제2노조에 해당된다.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의 한국노총은 1950년대의 대한노총과는 달리 민주적 노동운동의 전개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산하 노동조합들의 경제투쟁을 지원하는데 비교적 열성을 보였으며 노사관계제도의 개선 및 노동법개악 반대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투쟁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을 정책결정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시켜 주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통제하에 있던 한국노총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킬 힘이 사실상 없었으며 자신의 특권적인 지위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했다.

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였고 ‘전국적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과 ‘산하노동단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산별체제를 지향하는 규정을 없애버렸다(임혁백, 1994). 또한 1972년에는 노동3권을 법률로 유보하는 노동기본권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부의 노동통제강화에 대해 한국노총은 무력하게 끌려갈 뿐이었다. 한국노총은 1972년 3월 비타협적인 투쟁보다는 정부정책 및 자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천명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산업평화, 노사협조주의, 그리고 ‘회사일을 내 일처럼, 종업원을 가족처럼’이라는 가부장주의적 경영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공장새마을운동의 기수가 될 것임을 결의하기도 했다(최장집, 1988). 한국노총의 이러한 노사협조주의적 지향은 1980년대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유신체제하에서 노동조합 상부조직인 한국노총의 조직적 지도하에 수행된 노동운동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노총은 사실상 국가의 일방적인 통제를 받는 불구적인 노조로 변화되었다. 한국노총이나 산별노조의 간부는 ‘어용화’ 되었고 단위노조 간부는 ‘어용화’ 되거나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김동춘, 1995). 이 시기의 노동조합 결성운동이나 쟁의활동은 노총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으며 심지어는 노총의 방해 속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32)

1970년대 정부의 강력한 노동통제와 한국노총의 어용화는 급속한 산업화가 야기하는 노사갈등을 해소할 수 없었다. 일회적이긴 하지만 유신체제에 정면 도전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전개되었고, 정부와 한국노총에 대항하는 노동쟁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노동쟁의를 지도할 신노조주의의 구심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의는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 양상도 매우 다양했다.(33)

1970년대의 민주노조운동은 1970년 청계천의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자, 학생, 일부 지식인 등의 연합에 의해 표출되었다.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다

(32) 이 시기의 한국노총의 실제적인 활동은 교육활동정도에 머물렀고, 대부분의 산별노조 및 지역지부 등은 하부조직(지부, 분회)의 조합운동을 억제하였다(평가마저도 나올 정도이다(신인령, 1990)).

(33) 1970년대의 노동쟁의는 대체로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될 수 있다. 1) 취업노동자가 아닌 도시빈민들의 쟁의: 판자촌철거에 항의하는 광주대단지 사건, 2) 영세기업의 노동운동: 전태일의 분신을 낳은 청계지역피복노조운동, 3) 대기업의 횡포에 저항한 노동자들의 폭동: 과월한진노동자의 KAL빌딩사건, 4) 기존노조가 주도하는 임금인상투쟁: 섬유노조중심의 임금인상투쟁, 5) 신규노조결성투쟁: YH노조 등, 6) 노조조직내부의 민주화투쟁: 원풍모방 노조민주화투쟁 등(장명국, 1990: 131-136).

른 운동세력의 정치적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결국 노동운동은 학생과 종교인들의 민주화투쟁과 결합하면서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게 된다. 1970년대 노동운동을 지원한 주요한 사회운동세력은 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 노동청년회와 같은 종교계였다. 종교집단은 그 활동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권위주의 국가의 통제망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었다. 교회가 노동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준 것이다. 이후 학생운동이 민주화투쟁과 노동운동의 결합을 시도함으로써 노동운동은 점차 민주화운동의 한 부문으로 편입되어 갔다. 그 결과 산업현장이 아니라 교회와 학교가 노동운동의 중심지로 변하였으며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아닌 학생, 종교인, 지식인들이 노동운동조직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노동운동의 중심지가 현장에서 거리로 이동하였고 노동운동의 투쟁목표도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의 실현에서 한국사회의 급진적 변혁으로 바뀌어 가는 조짐을 보였다(임혁백, 1994).

1980년 5·17을 통한 군사정부의 등장은 새롭게 성장해 가던 민주노조운동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었다. 정부는 노조의 전국지역지부 해체조치 이후 1980년 12월 노동법개정을 통해 노조조직을 기업별로 강제하였고, 대부분의 남성노동운동가들을 순화교육장으로 끌고 가기도 했으며, 주요한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강력한 물리적 탄압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조치들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운동이 사회저항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전적 조치였으며, 동시에 정부의 노동통제기구였던 한국노총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노동운동은 매우 위축되어 있었다. 군사정부의 강력한 사회통제정책에 따라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었다. 1980년 407건에 달하던 노동쟁의건수는 1981년 186, 1982년 88, 1983년 98, 1984년 113건으로 줄어들었다. 노동운동의 유일한 전국조직인 한국노총 역시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더욱 무기력해졌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하기보다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노동통제기구의 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1987년에 전두환의 4·13 호헌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낼 정도로 어용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노동운동은 새로운 모습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국노총의 노사협조주의적인 운동과는 독립적으로 민주노조건설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 운동은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복수노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3조 5항)과 정면충돌하였기 때문에 기존 노동법에 대항하는 대정부투쟁과 어용적인 기존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노조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었다.(34)

3) 민주노동운동의 성장과 한국노총과의 경쟁: 1987년 이후

1987년 7·8월의 ‘노동자대투쟁’은 한국전쟁이후 노동운동의 새로운 분기점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시작되어, 7·8월 두 달 동안 무려 3,000여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으며, 정부는 이미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 파업투쟁을 계기로 노동조합의 조직화는 급속히 증대되어 87년 6월에 2,752개였던 단위노조가 87년 12월에는 4,086개로 단숨에 증가하였으며, 1988년에는 6,142개, 그리고 1989년에는 7,883개에 이르게 되었다.

7·8월 노동자대투쟁은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의 흐름을 벗어나는, 즉 한국전쟁이후 한국 노동운동을 대표하였던 한국노총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면서 시작된 새로운 주체들에 의한 새로운 조류의 노동운동이었다. 1987년 7·8월투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허명구, 1990: 102-105). 먼저 그간 겉으로는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상으로는 소수의 간부들이 조합원 대중과 분리되어 군림했던 한국노총의 노사협조주의와 결별한 것이었다.(35) 둘째, 대규모자본의 중화학 주력기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 당시 1,000명 규모 이상의 대기업 중 2/3 이상에서 쟁의가 발생하였다.셋째, 한국전쟁이후 처음으로 노동쟁의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고, 노동조합간의 연대파업이 행해졌다. 이러한 전국성과 연대성은 이후 한국노총과 구별되어 신노조주의를 대표하는 전국적 조직의 전설 움직임으로 나아간다.

1987년 이후 신노조주의의 상급조직건설운동은 제조업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전개되었다. 1987년 11월 「사무전문직 노동조합협의회」와 동년 12월 「마산·창원 노동조합총연합」의 결성을 시작으로 제조업 노동자는 「지역노조협의회」(이하 지노협)로, 사무직 노동자는 「업종노조협의회」(이하 업종협)로 결집하여 17개의 지노협과 13개의 업종협이 건설되었으며, 이후 지노협을 중심으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라는 전국조직

(34) 한국노총에 대항하는 1970년대의 민주노조운동과 비교하여 1980년대의 민주노조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먼저 1970년대가 경공업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었다면, 1980년대는 그 주체가 중공업 남성노동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1970년대는 노조의 무권리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이었다면, 1980년대는 노동운동의 자연발생성과 목적의식성(계급성)의 결합이 시도되었다는 점이다(허상수, 1990).

(35) 1987년 이후의 신노조주의 계열의 노동운동은 한국노총의 어용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한국노총에 대항하는 전국적인 제2노총건설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두개의 노총이 야기할 노동운동 내 분열을 우려하면서 노총을 개혁하여 전국적인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으로 전환시키자는 ‘노총민주화’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용기 외, 1989).

을 1990년 창립하여 한국노총과 대립하는 사실상의 제2노총을 조직하였다. 이후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신노조주의는 정부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으면서도 매년 전국적인 임금인상투쟁과 노동법개정운동을 추진하였으며, 95년에는 조직적으로 분리되었던 업종별노조들과 대기업노조들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제2노총인 민주노총을 건설하였다.

1987년 이후 신노조주의의 등장은 노사관계에서 한국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세력의 급속한 약화를 의미했다. 사실상 한국 노사관계에서 임금인상, 단체 협상갱신, 노동법개정투쟁 등 주요한 현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한국노총은 자신의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면서 내부의 조직위기를 체감했다. 한국노총은 20개 산업연맹과 약 140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의 40만에 비하면 양적으로는 훨씬 거대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매우 취약했다. 1993년 이후부터 한국노총을 탈퇴하여 신노조주의흐름으로 전환하는 노조의 수가 늘어났으며, 한국노총에 대한 조합비 납부도 순조롭지 않았는데, 이러한 불량조합비납부는 노동운동의 주력노조였던 제조업 노조의 경우 더욱 심했다.⁽³⁶⁾ 이에 한국노총은 ‘민주사회를 위한 노동조합주의’를 주창하면서 노총 개혁운동을 시도하였다. 노총내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신노조주의의 대중노선과 결합하여 노총의 관료제화를 극복하여 아래로부터의 노동 운동을 구현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신노조주의와의 협력한 이념적 갈등과 한국 노총의 고질적인 관료성과 보수성 등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노총이 임금통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정부와 자본의 임금가이드라인정책에 동의함으로써 오히려 일반노동자들의 반발만을 자아내었다.

1987년 이후의 시기가 한국노동운동의 제3시기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신노조주의가 주도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노협과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신노조주의는 분단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평등사회구현’, ‘노동해방’ 등 진보적 노동운동의 이념을 주창함으로써 한국노동운동 1시기(1945-1948)의 주체였던 전평파 조직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이념적으로는 강한 친화성을 보여주면서 진보적 노동운동의 성격을 나타내었다.⁽³⁷⁾

(36) 한국노총내부의 개혁파들이 제기한 내부의 핵심문제는 조직의 관료제화 및 비민주성의 문제였다. 조합원과 상층간부들과의 괴리가 심화되면서 조직운영이 상층 중심으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었고, 회사의 관리정책에 영향해가는 노조위원장들의 노동관료화도 조합원들을 실망시키는 사안이었다(노총실무자와 L과의 면담).

(37) 신노조주의의 핵심조직이었던 전노협의 활동을 총괄정리하고 있는 김진균교수의

이제 1990년대 중반을 넘으며 한국의 노동운동은 보수적 경향을 대변하는 전통적인 한국노총과 진보적 경향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으로 양분되어 갈등과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 노동조합운동의 이념과 목표 등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³⁸⁾ 특히 진보적인 신노조주의는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서구 노동운동이 쇠퇴하는 시기에 성장하였다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소결

해방 이후 미군정, 남북분단의 특수상황,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의 산업화 전략 등은 한국 노동운동의 ‘약화’ 또는 ‘보수화’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 좌익 계열 노동운동으로서의 전평은 미군정의 반소정책의 맥락에서 탄압을 받아 소멸하였고 이에 대한 보수파의 노동운동에 대한 대안은 대한노총으로 현재화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라기 보다는 정권의 유지에 기여하는 정치적 조직에 가까워 다분히 어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국 노동조합 상부조직의 보수적인 특성은 이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해 이어져 한국노총이 노사협조주의적 경향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군사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의 공백을 경제발전으로 메꾸어야 했기 때문에 산업화 전략에서 노동억압을 통한 노동의 정치적·경제적 배제를 강행하였으며 군사정부의 이러한 필요성은 한국노총을 유일한 전국 노동조합 상부조직으로 하는 노동운동만을 인정하고 진보적인 노동운동의 발생은 복수노조금지의 법적 조항을 통해 허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억압하였다.

다음의 평가는 신노조주의 흐름의 시각을 전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전통이 전노협을 통해 새로이 대두하였다. 노사협조적인 한국노총과 분리하여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를옹호하는 노선을 견지해 온 전노협은 마침내 한국노총의 흐름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이제 더 이상 ‘한국노총내 민주화’ 류의 주장은 무의미하게 되었고, 오히려 한국노총에 속했던 다수의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조운동에 합류하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제조업, 업종,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총으로 총망라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이 한국사회 노동조합운동의 실질적인 주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노총에 의해 독점되어 있던 노동조합운동이 40여 년 만에 민주노총을 맞게 된 것이다”(김진균, 1996).

(38) 두 조직의 경쟁과 갈등관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계열 각각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의식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 조차도 한국노총이 지나치게 자본에 타협적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윤진호, 정영태, 1995).

전평 이후 1987년의 신노조주의가 등장하기 까지의 40여 년의 기간은 노사 협조주의적인 노동운동의 독점시기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이에 저항하는 민주노동운동은 일정하게 나마 성장해 왔다. 이 맹아는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1970년대를 거치면서 싹이 트다가 마침내 정치민주화에 힘입어 나타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가시화, 활성화된다. 이러한 경향은 신노조주의 상급조직 건설운동으로 나타났는데 1995년 11월에 출범한 ‘민주노총’의 존재가 그 현실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출현은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볼 때 진보세력이 그들의 지분을 되찾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역사성이 발견된다. 민주노총은 아직 법적 단체로 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현 상황하에서 한국노총과 대등한 위치를 점해가는 상태에 있다. 민주노총은 크게 대기업노조와 업종별노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업종별노조의 높은 노조조직률과 이념적 진보성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앞으로의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집단임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현상은 1987년 이전의 노동운동이 4·19 혁명을 전후한 특정 시기의 노동운동을 제외하고는 블루칼라 노동자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이와 같이 한국 노동운동은 보수화되기 쉬운 구조적 조건이 존재한 가운데에서도 진보적 노동세력의 도전을 간헐적으로 받아왔다. 그러한 진보 세력의 도전은 국가를 등에 업고 있는 대한노총 그리고 한국노총의 존재에 의해 번번히 실패하여 왔다. 그러한 가운데 정치민주화, 그에 따른 문민정부의 출범, 시민사회 형성, 민주세력의 표출 등으로 민주노동운동의 싹은 민주노총의 실체로서 현재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은 국가와 자본의 일방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세력으로서 그 모습을 견고히 함과 동시에 어용화되어 있던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자극제로 작용하여 한국노총으로 하여금 노총민주개혁을 촉진하게 하는 등 한국 노동운동 전반에 걸친 민주화가 나타나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민주화 또는 진보화 현상은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에서 노동의 위상을 높혀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노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해 줄 수 있음을 함축한다.

VII. 교직의 여성화와 교사의 지위

1. 들어가는 말

해방 후 지난 50년간 우리 사회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교육제도 역시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

다. 급속한 인구팽창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해방이후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으로 보통교육이 실시되면서 교육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였다. 또한 교육이 사회이동의 수단으로서 갖는 도구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고등교육에의 수요 역시 급속히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 국민교육수준의 향상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교육보국의 이념을 견지해온 우리나라의 교육정책방향 또한 시대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근본적인 혁신을 시도해 왔다.

해방 이후 교육부문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제도의 한축을 이루는 교사집단을 이해하려는 학문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물론 해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많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동일직업 내에서도 극심한 분화현상이 일어난 반면, 교사라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그 성격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는데서 이들 집단이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교사집단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해방 이후 일어난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돋는 한편,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교사집단이 지난 50년간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추적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지속성 및 변화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집단의 양적인 팽창, 구성원의 변화 및 교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대적인 변화를 고찰하려고 한다.

2. 교사집단의 변화

1) 교사집단의 팽창

해방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 및 보통교육의 실시로 우리나라의 교육인구는 급격히 팽창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는 1945년에 약 136만 6천명에서 1970년 574만 9천명으로 25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출생율의 저하로 학생수는 점차 감소하여 1994년에는 410만명이 취학하고 있다. 반면, 교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45년 2만명에서 1994년에는 14만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재직 중에 있다. 중등학교 학생수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45년 85,000명에서 1994년에는 무려 457만명으로 약 50배 이상 증가하였다. 교사수는 해방 직후 불과 1,490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50년 후인 1994년에는 약 20만명으로 무려 130배나 성장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집단의 규모는 지난 50년간 급격히 팽창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중등 교육 부문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초등학교의 경우 1970년대를 정점으로 그리고 중등학교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을 고비로 학생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교육보국의 이념을 견지해왔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산업화를 통해 축적한 부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투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임으로써 질높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교육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수의 증감은 직접적으로 교사의 충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교육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결국 교사집단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2)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

초등학교 교원은 1965년 당시 80% 이상, 중등교원의 경우는 70% 이상이 20대 혹은 30대로, 이 당시 교원집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교육인구가 급격히 팽창한 반면, 해방전후 교원으로 임용 가능한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이 극히 낮았기 때문에 해방 이후 새로이 교육받은 인력으로 대부분의 교원을 충원함으로써 생긴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교사집단의 평균연령은 높아져, 초등학교의 경우 2, 30대 교원의 비율은 1975년 70%, 1985년 55%, 1994년 44%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그 결과 1994년에는 40대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으며, 50대 이상의 비율도 26%를 넘어서 40대 이상의 교원이 2, 30대 교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학교 교원집단은 지난 30년간 50대 이상 교원의 비율이 5%에서 18.5%로 크게 늘어났지만, 40대 이상의 교원비율은 1965년 25%에서 1994년 33%로 단지 8%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10년간 20대 교원의 비율은 39%에서 23%로 급격히 낮아졌다. 고등학교 교원집단 역시 중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1965년 2, 30대 교원의 비율이 74%로 짧은 교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고연령의 교원구성비가 늘어나 1990년대에는 4, 50대 교사비율이 40%를 넘어섰다.

이러한 교사집단의 고령화현상은 이미 전체 교사의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낮은 이직율과 교육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로 신규 교원의 수요가 점차 줄어듬에 따라 교원집단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구성원들이 변화에 소극적인 고연령층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직이 갖는 상대적인 지속성은 계속될 것이며 교원집단은 점차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Lortie, 1975). 따라서 새로운 세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속

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려는 교원들의 자기개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1965년에는 초등교원 중 79%가 고졸 또는 그 미만의 학력을 갖고 있었으나 점차 학력수준이 높아져 현재는 단지 15%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4년제 대학졸업의 교원은 이 기간 중 5%에서 46.4%로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 들어와 초등교원 양성기관이 2년제에서 4년제 대학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지난 10년간 대졸교원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초등교원집단의 질적 향상은 사회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원의 자격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가의 교원양성 정책이 변화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1965년 이미 60% 가량이 4년제 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교원의 학력수준 역시 지난 30년간 향상되었는데, 중학교의 경우는 1985년, 고등학교의 경우는 1975년경 이미 90% 이상이 대졸 이상 교원으로 충원되었다.

3) 교사집단의 이직율 추이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중등교원에 비해 이직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초등교원의 경우 1970년 6.7%의 이직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1968-71년 동안 평균 약 5%의 이직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기간에는 단지 2-3%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중학교 교원의 경우 1969년 10.5%로 최고의 이직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1960년대말부터 1980년대초까지 평균 약 8%가량의 높은 이직율을 보였다. 고등학교 역시 인문고의 경우 1969년 10.2%로 최고의 이직률을 보였으며, 1960년대말부터 1980년대초까지 중학교 교원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이직률을 기록하였다. 실업고의 경우에도 1960년대말부터 1980년대초까지 약 7-8%의 높은 이직률을 보였으며, 이 기간중 1979년에는 10.6%로 최고의 이직율을 기록하였다.

흥미있는 현상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여교사의 이직율이 남교사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을 가계보조적인 노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하여 여교사가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가진 여교사들이 출산을 하게될 경우 학교로부터 종종 퇴직을 강요받았으며, 여교사 스스로도 결혼이나 출산후에는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기간 중 교직의 여성화경향에 남교사의 높은 이직율이 기여했다는 주장(이인효, 1992; 임선희, 1992)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90년대에는 오히려 여교사의 이직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점차 사교육

비 등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여성의 수입이 가구소득의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뿐더러, 경력을 추구하려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교직의 여성화경향

1) 학교급별 여교원비율

초등학교 여교사는 1952년 단지 140명으로 전체의 0.4%에 불과하였으나 2년뒤인 1954년에는 무려 8,047명으로 급증함으로써 19.7%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증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성인력의 상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55년 이후 40년간 급격한 변화없이 1955년 19%(7,322명)에서 1994년 54.5%(75,848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여교사의 규모는 10배 가량 늘어났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2배 이상 높아져 1990년 이후 남교사보다 오히려 수가 많아졌다.

중학교의 경우 1955년 여교사의 수는 360명으로 전체 교원 중 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65년 16%, 1975년 25%, 1985년 38.5%, 그리고 1994년 49%로 여교사비율은 급속히 상승하였다. 특히 여성화의 속도가 가장 빨리 진행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연평균 약 1.4%씩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역시 초, 중학교에 비해 비록 그 증가추세가 완만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1955년 고등학교 여교사는 208명으로 불과 4.2%에 지나지 않았으나 1965년에는 9%(인문, 실업 합쳐서), 1975년 13%, 1985년 20%, 그리고 1994년 약 23% 정도로, 특히 1970년대에 여교사의 비율이 급증하였으며 그 이후 증가속도는 둔화되어 1990년대에는 거의 정체되었다. 계열별로는 실업계의 경우 초기에는 여성화의 정도가 인문계보다 훨씬 낮았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1980년 이후 인문계보다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여학생들의 실업계 입학이 급증함에 따라 실업계 여교사의 수요가 높아진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급별로 여성화경향을 비교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여성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고학년 학생들의 통제에 따르는 어려움때문에 관리자들이 여교사의 임용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예비여교사 역시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교원임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이는 특히 교원임용이 순수하게 관리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취학인구비율에 있어 남녀간 차이가 거의

〈표 8〉 각급학교의 여교사수 및 여교사 비율

	초등교원	중학교원	인문계	실업계
1952*	140 (0.4)			
1953**	— —	489 (6.8)		
1954***	8,047 (19.7)	567 (6.2)	184 (3.3)	
1955**	7,322 (19.2)	360 (5.0)	208 (4.2)	
1957***	10,993 (20.2)	1,463 (11.3)	432 (4.9)	
1959***	11,368 (18.6)	— —	— —	
1961**	13,672 (22.0)	— —	— —	
1963***	17,467 (25.6)	2,303 (16.9)	658 (12.5)	132 (3.2)
1965	20,107 (25.5)	3,078 (16.1)	942 (11.9)	308 (5.0)
1970	29,418 (29.1)	5,809 (18.6)	1,196 (12.2)	588 (5.9)
1975	36,440 (33.7)	11,755 (25.1)	2,904 (14.2)	1,653 (10.8)
1980	43,729 (36.8)	18,010 (32.8)	4,734 (17.2)	3,995 (17.0)
1985	54,500 (43.1)	26,808 (38.5)	7,853 (19.6)	6,328 (21.4)
1990	68,143 (50.1)	40,911 (46.5)	12,828 (22.1)	8,401 (24.3)
1994	75,848 (54.5)	48,931 (49.0)	12,142 (21.8)	10,436 (25.3)

출처: *『대한민국통계연감』(1952).

**『대한교육연감』(1953, 1955).

***『한국통계연감』.

1965년 이후는 『문교통계연보』, 『교육통계연보』(1994).

없는 반면, 아직까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학생의 낮은 취학율로 인하여 여교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외에도 학교관리자와 학부모들의 교사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 “남교사가 우월하다”는 고정관념은 고등학교 관리자들로 하여금 여교사의 고용을 기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화경향을 둔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이종범, 1994).

2) 관리직(교장, 교감)에서의 여성비율

그러나 관리직에 있어 여성의 비율은 전체 교직의 여성비율에 비해 매우 낮으며, 여성비율의 증가현상 역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초등학교의 경우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비록 점진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1994년 현재 단지 5%에 그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도 지난 30년간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단지 4% 증가하여, 1994년 현재 6.4%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문계고등학교는 오히려 1970년 6.9%에서 1994년 3.6%로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낮아졌으며, 실업계고등학교는 증감없이 1970년 이후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전체 여교사의 비율에 비해 극히 낮은 이유로는 우선 여성들의 이직율이 남교사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관리자로 승진가

능성이 있는 교사 중에는 여교사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은 관리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여성의 노동은 가계보조적이라는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여교사의 승진기회를 제한하는 성차별적 관행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교사들간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관리자로 승진하기 보다는 가사노동과의 병행이 비교적 용이한 평교사의 지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3) 교직의 여성화요인

이와 같은 교직의 여성화를 논의한 기존의 연구(이인효, 1992; 임선희, 1992)에서는 주로 공급요인에 초점을 맞춰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여교사의 비율이 늘어났다고 본다. 실제로 교육대학(사범학교) 여학생비율은 1952년 25%에서 1980년대초 80%를 넘어섰으며, 특히 1975년-80년사이에 무려 20% 이상 증가하였다. 일반 4년제 대학의 여학생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1952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는 31%를 기록하였다. 특히 사범계대학의 여학생비율은 이미 70년대에 50%를 넘어섰다. 이러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비율의 증가는 80년대 이후 지속된 여성 대졸자의 취업률저하(임선희, 1992)와 함께 교직의 여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Strober와 Tyack(1980)에 따르면 교직의 여성화경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교사에 대한 수요의 측면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즉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는 교사의 수요를 급증시키는데 교원자격을 갖춘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인력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여교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미혼 여교사를 고용할 경우 이들이 교직을 평생경력이 아닌 임시직으로 여겨 결혼 또는 출산 후 사직하거나 반강제적으로 이들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비용감소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는 여교사를 선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중등교육단계에서 남학교와 여학교가 분리된 경우, 여학교에서는 남학교에 비해 여교사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여학생비율의 증가 역시 여교사의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여교사에 대한 수요요인이 교직의 여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학생비율과 여교사비율간의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1962년 이후 1980년까지 인문계고등학교 여학생과 여교사의 비율은 실업계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그 이후 점차 실업계고등학교 여학생과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져 오히려 현재는 인문계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실업계 내에서도 국공립고등학교 대 사립고등학교 여교사 및 여학생비율에 관한 비교에서 동일하게 나타

난다. 물론 이러한 단순상관관계를 통해 여교사에 대한 수요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남자고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찾아보기 힘든 반면 여학교에서는 많은 수의 여교사를 임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여학생수의 증가는 여교사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교직의 여성화에 기여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교직의 여성화경향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촉진된다. 우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규모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이에 따라 교육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교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팽창함으로써 여성들의 교직진출이 용이해진다. 또한 거대화된 도시학교에서는 그 규모가 커지고 관료화됨에 따라 교사 1-2명에 의해 운영되던 농촌학교와 달리 개별 교사들에 의한 학생통제의 필요성이 낮아졌으며, 관리직과 교수직의 분화로 교수행위 이외의 업무 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여교사의 교직진출을 촉진시킨다. 이 외에도 여성의 가정성(domesticity)을 강조하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직업선택에 지리적 제한을 가져옴으로써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여성들의 교직진출을 촉진시킨다. 실제로 서울과 기타지역 간의 초등학교 여교사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예상대로 1950년대 중반 이후 서울지역 여교사비율은 기타지역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편, 임용과정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공립학교 경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원을 충원함으로써 남녀간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사립학교는 교사 임용권한이 재단에 부여됨으로써 교사임용기회에 있어 국공립학교와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사립학교 여교사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점차 줄어들어 198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국공립학교 여교사비율이 더 높아졌다. 중학교의 경우 역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사립학교 여교사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1994년에는 국공립학교 여교사의 비율이 2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도 1990년대에 그 비율이 역전되어 1994년 현재 국공립학교의 여교사비율이 약 8% 가량 높다.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여전히 사립학교 여교사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는 설립주체별 여학생 비율에 있어서의 커다란 차이가 여교사에 대한 수요의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994년 사립학교 여학생의 비율은 63%인데 반해 국공립은 36%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방이후 진행된 국공립학교 비율의 증가 역시 교직의 여성화경향을 촉진시킨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교직의 지위변화

서구의 경험에 의하면 산업화에 따른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교사들의 지위하락에 기여하였다(Kelly, 1989; Pritchard, 1983). 해방이후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겪은 우리나라 교사집단의 지위는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등교원의 평균임금과 전체 대졸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입수가능한 자료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국한되기 때문에 해방후 50년간 교사들의 상대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록한 이 시기는 교사들의 지위변화를 가장 뚜렷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표 9〉에 의하면 1970년대초 중등학교 교원의 평균임금은 전체 대졸근로자의 약 90%였으나, 점차 그 격차는 벌어져 고도성장을 기록하던 1970년대말에는 대졸 평균임금의 약 2/3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으로 미루어볼 때, 60년대까지는 적어도 경제적인 보상에 있어 교사들은 다른 대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70년대 산업화의 진행이 급속화됨에 따라 점차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양성에 필요한 비용(즉, 교육비)을 낮추기 위해 교사들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강요받은 반면, 산업부문에서는 고급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대졸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이 시기동안 교원들과 전체 대졸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교원들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호전되어 1980년대말에는 1970년대초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흥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상대적 임금수준의 변화가 앞에서 살펴본 교원의 이직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교원의 임금이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낮을 때 교원들의 이직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임금차이가 줄어듬에 따라 이직율도 낮아지고 있다.

한편 성별 임금격차를 비교해보면 이 당시 교직의 급속한 여성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중등여교사의 평균임금은 전체 대졸 여성근로자와의 임금과 비교할 때 점점 그 격차가 줄어 1980년대말에는 전체 평균임금과 비슷하거나 전문기술직 종사자보다 약간 낮은 정도이며,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는 대졸여성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교사의 경우 역시 1970년대말 이후 임금만을 놓고 볼때 교사들의 경제적 지위는 호전되고 있으나 1980년대말에도 전체 대졸 남성근

〈표 9〉 중등학교 교원과 대졸근로자의 평균임금 비교

	중등학교 교원 평균임금(A)	대졸근로자 평균임금(B)	A/B*100(%)
1972	49,466	54,560	90.7
1976	147,220	167,982	87.6
1977	176,217	204,955	86.0
1978	206,642	269,998	76.5
1979	246,751	364,010	67.8
1980	297,010	413,318	71.9
1981	—	—	—
1982	452,254	558,025	81.0
1983	493,288	604,663	81.6
1984	524,062	650,739	80.5
1985	582,369	686,490	84.8
1986	623,158	718,266	86.8
1987	692,137	779,332	88.8
1988	745,573	839,441	88.8
1989	772,661	930,396	83.0

출처: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로자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교사직이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남성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낮은 경제적 보상 외에도 사회구성원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은 교사집단의 위신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비록 교사집단의 교육수준이 지난 30년간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국민교육수준의 향상과 비교해 볼때 교원들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990년 학부모들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30대, 40대 전체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를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11년, 40대의 경우는 9.5년으로 1970년에 비해 30대는 약 4년, 40대는 4.7년 정도 학력수준이 높아졌다. 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사들의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는 지난 30년사이에 약 2-3년 정도, 중등학교 교원은 약 1-2년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학력수준 향상에 있어서의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교사들이 갖는 전문성의 가치하락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위신의 상대적 하락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5. 소결

해방 이후 현재까지 교직의 여성화경향은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를 설명하

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의 측면은 물론 다양한 촉진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직의 여성화에 기여한 요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급증은 여성노동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교직진출이 증가하였다. 민주주의 이념의 도입으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이는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의식의 변화를 촉진, 그 결과 여성의 교직진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의 전문직 취업기회 제한으로 비교적 폐쇄성이 약한 교직으로 많이 진출하려고 한 반면, 산업화과정에서 고학력 남성이 진출가능한 산업분야는 다양해짐으로써 교사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되어 남성인력의 유인기가 낮아졌다. 또한 도시화 및 국공립학교의 증가는 여성의 교직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성차별 관행이 점차 약화됨으로써 기혼여성의 이직율이 낮아졌으며, 교직의 여성화가 진행될수록 교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교사의 역할모델이 늘어남으로써 여성들의 교직진출은 촉진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지난 50년간 여성의 교직진출이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여교사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다(임선희, 1992). 그러나 교직의 여성화를 촉진시켜 왔던 이러한 요인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여교사의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지나친 여성화를 우려하여 교육대학 입학정원의 25%를 남학생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역차별정책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기회의 평등에 위반되는 이러한 정책은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됨으로써 초등학교단계에서 교직의 여성화경향은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교사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더라도 여교사를 스스로가 교육관리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경력추구과정에서 관행적인 성차별이 지속된다면 교직의 성별분화는 지속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교직의 여성화경향으로 교실내 권위의 존재가 여성화됨으로써 초등학교의 경우 동료집단내에서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의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직의 성별분화로 관리직은 남성, 일반교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고착됨으로써 오히려 성차별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의 지위하락은 여러가지 교육 내적인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우선 교사들의 지위하락은 교사들의 불만족을 야기시킨다. 최근 교사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단지 11.5%만이 보수수준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16.4%의 교사만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21, 1996). 이와 같은 교사들의 사기저하는 결국 교육과정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교직

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우수인력의 교직유인이 어려워짐으로써 교원질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교직의 전문가적 지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들간에 교육과정에 대한 갈등과 마찰이 심화될 수 있으며, 결국 교사들의 학생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VII. 여성과 가족의 반세기 삶

1. 들어가며

대한민국에서 남녀평등의 법제적 지위를 보장받게 된 것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1948년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이다. 6.25 등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여성은 한 가족을 이끄는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참여를 넓혀나가게 된다. 산업화와 급격한 정치변동은 한국의 여성과 가족의 삶을 어느 때보다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정치적 파고속에서 근로여성, 주부, 어머니들을 망라한 여성들은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독자적인 여성운동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여기서는 지난 50년간 변화를 겪어온 한국의 여성과 가족의 모습을 시기별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변화의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조선의 광복과 여성의 참정권

일제가 조선을 식민자본주의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계급은 토지로 부터 분리되어 노동력을 팔아야 했던 노동자 계급 가족이었다. 식민지의 조선여성들은 전통적인 남녀유별과 성별격리의 유교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함께 임금노동자가 되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가족을 지켜가는 고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일제 하에서 혼하고 천해빠진 것이 조선사람의 노동력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게 팔린 것이 조선여자의 노동력이었으니 여성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편박을 짐작할 수 있다(서연미, 1979: 316). 이렇게 여성이 장시간의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를 빼앗긴 농민가족이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 경제기구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이었다. 땅을 잃은 농민가족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자식들의 손을 잡고 만주, 간도, 일본 등지로 유랑의 길을 떠났다(박석분·박은봉, 1994: 54).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19년 월슨의 민족자결선언 등 세계정세의 변화는 조선독립의 의지를 북돋우는 데 기여하였다. 이에 1919년 3월 1일 온 강토에서 만세시위운동이

벌어지게 되며 노동자, 농민, 청년, 지식인, 종교인은 물론 기생과 비복에 이르기까지 전 민중이 참여하였다.

1944년 8월 조선총독부는 여자정신대 근무령을 발표했다. 이 법에 의해 수많은 조선여성들이 군수공장과 군위안소로 강제동원되었는데 그 숫자는 무려 20여 만명이었으며 군부대에 끌려가 위안부가 되거나, 공장에 배치되었다가 다시 위안부로 끌려간 경우도 많았다.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은 대부분이 아주 가난한 집의 딸들이었다(박석분·박은봉, 1994). 1948년 연합군이 승리하고 조국이 광복을 맞았어도 위안부로 끌려갔던 정신대 여성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 술집과 환락가를 전전하며 구걸하는 신세로 바뀌어져 버렸을 뿐이었다.

“내겐 갈 곳도 없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내가 찾을 사람도 없었고 나를 받아 주는 곳도 없었다. 나는 방향도 모른 채 걷고 또 걸었다”(배봉기, 1990: 41).

1945년의 조국광복은 여성에게 자유의 문을 열고 그들의 요구와 주장을 내세우도록 하였다. 1945년 8월 임영신 등은 남녀평등 권리주장을 내세우면서도 현모양처, 일치단결 등을 선언하며 이승만박사의 추종세력으로서 조선여자국민당을 조직하였다(최민지, 1979: 255). 여자국민당은 여권신장을 위한 전의안 중에 간통죄에 관한 쌍별제를 위시하여, 부인이 독립된 재산소유권을 인정하는 부부별산제와 축첩 및 중혼을 금하는 일부일처제의 결혼법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요구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헌법에 남녀평등과 여성의 참정권으로 보장되었다. 그리고 남한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좌익단체들은 불법화되었고 우익단체인 독립촉성애국부인회 및 애국부인회 등이 통폐합되면서 대한부인회로 결성되었다(이효재, 1989: 241).

3. 6. 25와 1950년대 월남민의 가족생활

1950년대에는 민족사의 비극인 6.25전쟁을 거치면서 가족은 인위적인 해체에 직면하였으며, 전쟁터로 출전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남편을 대신하여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와 자녀교육까지를 책임지게 되었다. 전쟁 직후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생활이었으나 돌아갈 고향조차 없는 월남인들에게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서 이들은 양식배급과 절식, 행상, 농가의 하인이나 가사보조인 등의 막노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의 비참했던 피난시절을 광장시장에서 포목점을 경영했던 한 월남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전염병이 걸려 딸 아이가 죽었어요. 딸아이는 돌을

한달 앞두고 죽었는데, 참 잘 죽었다 싶지, 애석한 생각이 안 들어요. 먹고 살 걱정만 돼요. 참 한심하죠? 사는게 아니었어요.” …… “어떻게 살까 막막한데, 평안북도에서 온 피난민들을 보니까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 때 마침 내게 재봉틀이 하나 있었어요. …… 그 때는 진짜 여자를 머리로 이어서 먹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때 어떻게 그 생활을 했을까 싶어요. 악에 바쳤으니까 했지, 고생인줄 알면 못했을 거예요. 그저 자식 크는 생각만 하고서 살았지요”(윤묘희, 1990: 112-113).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월남인들은 본격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강원지역의 도시지역에 모여들어 이농인구들과 함께 광범위한 도시 빈민층을 이루었다. 특히 서울의 동대문과 낙원동 시장, 인천과 속초의 어시장은 월남인들이 상권을 획득한 중심지역이었다(박명선, 1991: 98). 이들에게는 정착기반이나 연고가 없었으므로 같이 월남한 가족들끼리 장사를 하여 생활하게 된다. 월남인들은 부부, 자녀, 조부모 등의 구성원들이 모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친척 또는 동향인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월남인들의 가족형태를 보면, 부부 또는 출가한 자녀 중 한 명이 시부모와 친정부모 또는 친부모와 장인 장모의 일부와 한 집안에서 함께 사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형제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일 경우 형제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가족결손을 매우는 경우도 많았다. 또 실제혼이 늘어난 것도 이 시기부터인데 이것은 가능한 빨리 가계를 분담하는 것이 시급하고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박명선, 1991: 102-103).

1956년 정부통계에 의하면 6.25 전쟁으로 가장을 잃은 부녀자가 59만명이 생겨났으며, 그들에게는 평균 2명 이상의 부양자녀가 있었다. 이들을 돌보는 모자원이나 자매원 등의 보호시설에는 5-6천명 정도만이 이 시설에 수용될 수 있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모자가정은 생활대책이 절박한 상태였다. 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부녀자들이 생활난으로 미군상대의 소위 ‘양공주’나 일반 매춘행위자로 전락하여 전국적으로 사창이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1957년 통계는 전국적으로 이들의 수를 4만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일찍이 ‘인신매매금지령’과 ‘공창폐지령’ 등이 입법화된 상태이나, 외국군 주둔과 전쟁으로 인한 생활난으로 일부 여성은 몸을 팔아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젊은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매춘을 생계대책으로 삼는 한편, 다방업 양재업 미장원 요리점에 종사하거나 가족의 부양책임자로서 자영하는 수가 늘어갔다. 이들 중에서 남편없는 여자들의 문란한 성관계와 재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곤 하였다. 이 시기에는 미군과의 자유로운 성관계와 ‘자유부인형’의 무책임한 삶이 마치 해방된 것인양 오인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지위와 가정의 안정에 대해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이었다(이효

재, 1989: 243 재인용).

1950년대의 여성활동은 6.25의 발발로 가장을 잃은 부녀와 이산가족의 구호와 선도에 집중되었다. 정부에서는 여군과 여경을 창설하여 여자도 총을 메고 전쟁터에서 싸웠으며 여경은 내치안을 담당하였다. 여성단체들도 일선군인 위문, 상이군인을 돋는 봉사활동, 피난민 부녀와 고아를 돌보는 봉사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주로 부인들을 상대로 시국계몽강연을 개최하였다. 황신덕·박순천·이태영·이희호 등이 1952년에 발족한 여성문제연구원은 1953년 간통죄에 남녀쌍벌죄 적용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성문제연구원은 대한부인회, YWCA, 기독교질제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연합하여 여성의 법적지위향상위원회를 조직하여 계몽에 힘쓰기도 하였다. 1959년에는 여자의 호주상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1945년의 일제패망과 함께 위기를 맞은 식민지자본주의는 미군정하에서 일本人의 귀속재산의 처분과 농지개혁을 중심으로 관료자본주의로 재편되었다. 1950년부터 실시된 농지개혁은 형식적으로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게 하였으나 유상물수, 유상분배 자체가 무산자인 소작인에게는 불리했고, 농업에 대한 정부투자결여와 미국 잉여 농산물의 대량도입으로 농산물의 저가격이 유지되면서 농업부문은 쇠퇴해져 갔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지주 소작관계의 재생과 영세 소경영의 정체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때 농민들은 주로 농촌에서 소작농, 영세빈농, 농업노동자로 존재하거나 일부는 아직 자본재부문의 자본축적이 미약했던 도시로 유출되어 도시빈민이 되었다. 한편, 6.25 전쟁 후 남한으로 넘어 온 월남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휴전선 부근과 대도시, 특히 서울에 몰리면서 행상, 일반잡역, 구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도시빈민층을 광범위하게 확대시켰는데 이들의 정착이 완료되는 1950년대 말까지 도시비공식부문은 서비스업의 확대를 중심으로 강화되었다(박명선, 1991: 91).

그러나 1950년대 말에 원조가 줄어들면서 경제위기를 맞게 되자, 매판정권에 대한 시민, 학생들의 저항이 4.19혁명으로 분출되었다. 본격적인 가족의 변화는 196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며, 이를 통해 가구경제, 가구의 유형 및 결혼, 가사노동의 제반 가족생활 등이 크게 변하였다.

4. 산업화와 1960년대의 여성노동

1960년의 4.19혁명이 미완으로 끝나고 5.16쿠데타로 등장한 박정권은 국가가 공업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구분된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1965년

의 한 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일본자본을 비롯한 외국자본이 광범하게 진출되도록 하였다.

1960년대에 한국사회는 섬유와 식품 등의 경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저곡가정책은 물가를 안정시켜서 도시 노동자의 생계비를 저하시키며 자본으로 하여금 저임금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농촌의 생활기반을 흔들어서 농촌의 가족들은 아들 혹은 딸들이 먼저 도시로 진출하여 생활비를 부치는 식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특히, 저임금을 기초로 한 1960년대 수출지향적 산업화에서 양질의 저렴한 여성노동력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온 16·17세의 어린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강이수, 1992: 347). 가족중의 남성들, 가령, 남동생을 위한 학비마련을 위한 누나의 희생등은 이시기의 여성에 가지고 있던 희생이자 발언권이 강화된 예로 들 수 있다.

1968년에 실시한 경기도 농촌지역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로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공장의 단순한 기능을 가진 노동자들이었으며, 재단사, 목수, 미싱사 등의 기능직들도 있었다(이만갑, 1973). 농촌에서는 자녀들이 도시로 떠나가자 노인만으로 구성되는 가족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경제활동의 다양화가 여성의 노동증가를 요구하게 되어 여성건강과 모성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1960년대의 산업화가 저임금구조 아래 진행된 것은 농촌 뿐 아니라 도시 노동자의 삶도 위협하였다.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원의 취업으로 소득을 극대화하고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인다. 다음은 도시빈민 가족의 생존전략에 관한 인터뷰에서 나타난 이동경위와 1960년대의 생활상이다.

사례) 1944년생인 근부인은 농촌에서 국민학교를 다니다 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서울에 올라와 남의 집 식모를 살았다. 1937년생인 근씨는 빈 농의 4남2녀 중 셋째로 가난 때문에 국민학교를 중퇴하고 20세에 상경하여 노점 과일장사로 서울생활을 시작하였고 결혼한 뒤에는 과일가게를 차렸으나 실패하여 가게를 처분하고 집값이 싼 사당동으로 이사했다. 더 이상 밑천도 없고 방세도 남은 게 없어서 형님집 뒷방을 얻어 살면서 근씨는 주물공장 공원으로 취직을 하고 부인은 길가에서 옥수수 등을 째서 파는 행상을 시작했다. 그 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하나는 업고 하나는 옆에 앉혀 놓고 장사를 했다(조은, 1990: 196).

1960년대까지는 육아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배제되지 않았다. 1963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21.9%만이 “가정밖의” 직장에 나가는(비농) 피고용자의 상태에 있었다. 취업자의 대다수(63.3%)는 가정과 생산이 일치되고, 성에 따른

노동영역의 엄격한 구분이 어려운 농림업 종사자였다. 그러므로 부모가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양육역할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배제되지는 않았다. 또한 조금 성장한 자녀들이 어린 동생을 돌보는 등 양육이 여성에게만 전담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성원간에 공유되고 있었다(김혜경 외, 1992: 296에서 재인용).

여성의 경제활동은 총출산율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 한국의 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온 것은 그동안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통제방법으로 사용된 인공유산의 보급과 1960년대 3자녀갖기 운동으로 전개된 가족계획사업을 들 수 있다. 1961년부터 인구정책으로 시행된 피임약제와 기구의 국내생산 및 수입의 허가, 불임수술과 같은 영구피임의 권장 등으로 출산통제가 일반화되었다(문소정, 1992: 333). 가족계획사업은 시행된 초기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반응을 가졌으나 점차 실천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적인 총출산율은 1955-60년의 6.3명에서 1965-70년은 4.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문소정, 1992: 333에서 재인용).

산업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여성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으나 지위향상이나 권리주장을 요구하거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집단적 행동은 197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 된다(이효재, 1989).

5.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운동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였던 수출주도의 경제발전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경제성장률은 1969년의 13.0%에서 1970년에는 7.4%로 급락하였으며, 자본축은 유신체제를 통하여 이러한 위기를 더욱 억압적인 방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유신하에서 국가는 임노동에 대한 착취를 강화해서 1970년대 중반 노동자는 세계최장인 주당 5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저임노동력의 착취를 위해 저곡가정책을 관철하였다. 결국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달성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차관과 투자의 형태로 유입한 자본을 기초로 하여, 저임금-저곡가체제하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60년에 28.4%에서 1970년에는 37.6%가 되었다. 동 기간의 남성경제활동참여율이 각각 76.7%, 72.5%인 것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거의 정체되어 있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970년대를 통한 저임금정책에 기반한 수출산업의 추진은 대

기업의 성장과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로 여성노동자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1970년에 10인 고용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생산직분야 여자근로자의 수가 36만명이던 것이 1978년에는 10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섬유 의복 고무 전자기기 식료품 등의 노동집약적인 부문에는 여성근로자가 크게 집중되어 있다(강이수, 1990: 347).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 시기의 여성들의 취업은 판매·서비스직으로의 집중,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등 급격한 산업화가 놓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박정권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의 보호육성과 외자기업의 유치보호를 위해서 공장새마을운동을 통해 억압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어떤 기업에서는 미혼의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신부수업과 현모양처가 되는 교양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은 노무관리, 노동배치 등에서 남자들에게 예속적 지위에 놓이게 되고 폭행, 성적굴욕과 수모 등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 연장 내지 노동강화, 생리휴가, 월차휴가, 산전산후휴가의 이용에 대한 압박, 결혼퇴직제, 여성조기정년제 등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노동조건에서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적은 임금을 받아서 자신의 생계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수입을 도와야 하는 처지였는데도 기업체들은 노임을 체불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사무직 여자은행원의 경우 차별문제는 임금차별 뿐만 아니라 승진 인사 직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나타난다. 혼인하거나 30세가 지나면 퇴직한다는 각서를 채용당시에 받는 차별제도 속에서 여행원들은 1974년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1976년에는 결혼각서의 제출은 폐지 되었다. 그러나, 남녀분리호봉제와 동등한 승진기회를 막는 인사규정이 노사협의를 거쳐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남성위주의 은행노조측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조합원들의 반대를 무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이효재, 1989: 262).

1970년대의 대표적인 여성노동운동은 1970년대에 분신한 청계피복노동자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중심으로 한 여성노동자운동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킨 원풍모방노조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남영나이론의 임금인상투쟁 및 해태제과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을 요구한 노동조건개선투쟁도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가장 처절한 투쟁을 전개한 경우는, 민주노조를 사수하려다 집단해고를 당한 동일방직사건과 직장폐쇄에 직면한 YH노조원들이 신민당사에서 집단농성하다가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한 여성노동자가 죽고 생존권이 짓밟힌 사건이다. 1970년대에 전개된 자율적인 민주노동운동은 주로 여성노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1975년 이후로는 거의 여성들의 투쟁만이 노동운동의 명맥을

이루었다.

1970년대는 특히 여성해방을 요구하는 국제적 여성운동이 고조된 시기여서 국내의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1977년 범여성단체의 가족법개정 촉진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신체제를 지지하는 보수세력이 정권유지와 안정을 목적으로 가족제도의 민주화를 반대하였다. 1977년에 통과된 법안은 찬반층들의 초점이었던 호주 제도와 동성동본불혼제도를 그대로 남겨둔 채 재산상속 등에서 남녀의 성차별을 약간 완화한 정도에 불과하였다(이효재, 1989: 256).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화교육은 1973년 크리스챤 아카데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화여대에는 여성학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와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977년부터는 여성학강좌가 설치되었다. 이것이 타대학으로 확산되어 젊은 여성들의 의식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일부 여학생들은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지원해 온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와 연대하여 정부의 관광정책에 도전하였다. 정부는 외화획득을 빙자하여 여행사들을 통해 ‘기생관광’을 해외에 선전케 하는 등 매춘을 외화획득을 위한 관광산업으로 삼는 정책을 천명하였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항의하고 건의문을 제출하는 한편 일본교회여성들은 일본여행사의 실태를 조사하고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였다(이효재, 1989: 251).

1970년대에는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여성지식인들이 늘어나게 되어 남성들과 동등하게 활동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진보적인 남성들 조차도 여성들의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던 것이 사회풍토였다. 1970년대에 대학생활을 했던 여성들의 회고담은 당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항하다 끊임없이 좌절하였던 여성 지식인의 고뇌를 읽게 해준다.

“70년대에 대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은 자신의 진로와 직업과 운동을 연 결시켜 결정했다. 가사노동에서 우리는 지극히 현실타협주의자들이다. 남편들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여성이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점과 남녀분담의 원칙정도는 이해하고 있지만 너무도 바쁜 사회운동의 일정에 쫓기다 보니 가사노동으로부터 습관적으로 멀어져 있다. …… 우리 때는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더라도 대중 앞에서는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 생활행태는 뒤지 않고 대중적이고 서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들은 부부가 함께 사회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편은 주역이고 아내는 조연이며, 남편은 앞전이고 아내는 뒷전이다(장하진, 1995: 15-16).”

여성에 대한 의식이 다소 진보적일 것이라고 기대되는 운동권의 남편들 조차 이러한 진대, 일반인들에게서 가사분담이나 자녀양육의 참여는 기대하기

힘들다. 더우기 승진을 위한 경쟁과 최근 후의 비공식적 친교를 중요시 하는 사회의 풍토는 남성들의 양육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각박한 생존 경쟁속에서 남성들은 별로 권력도 주어지지 않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나 양육 역할에 대해서는 부담없이 아내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중산층 가족에서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양육을 책임지는 자본주의 적인 성별분업이 부상한다. 이런 현상은 70년대 초반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부권상실을 우려하여 전전한 남성상과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는 아버지상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김혜경 외, 1992: 29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농가에서는 계속 증가하여 1963년에 40.9%이던 것이 1974년에는 53.4%로 대폭 늘어났다(서연미, 1979: 319). 농촌에 남은 여자들은 이전에 안하던 일까지 해야만 한다. 1979년대에 시작된 새마을 공동작업에서 여성들은 자갈과 모래를 펴나르고 벽돌을 찍어내는 등 남자들 못지않게 많은 일을 하였다(이지은, 1979: 290-291). 농촌주부들 자신이 너무 피곤하여 자녀들을 건강하게 돌볼 수 없고 심지어는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 문고리에 끈을 매어 달아둔 채 들로 나간다는 사람도 있다.

“들에 나가 일하면서도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요. 다치지나 않나. 위험한데 손대지나 않나 해서요. 네 살짜리를 두고 나가거든요. 애들도 고생이에요. 대여섯살밖에 안된 것들이 제손으로 점심 챙겨먹고 어떤 때는 저녁밥도 지어놓아야 해요. 동생이 있으면 물론 동생도 봐야지요. 작은아인 업고 큰아이는 손을 잡고 들로 나가는 부녀자. 악을 쓰며 우는 네댓살짜리 아이와 회초리를 든 채 따라오지 말라고 협박하는 엄마. 지게그늘에 갓난애를 눕혀놓고 일하는 신혼의 엄마 이건 아이도 어른도 사는게 아니라 차라리 형벌이예요(이지은, 1979: 292 재인용).”

그러므로 농촌여성의 생산노동 증가가 여성해방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가사 노동의 부담위에 겹쳐진 노동량의 증가와 고통의 심화라는 성격이 더 두드러진다. 더우기 많은 농촌여성들이 보건소에서 알려주는 대로 루프와 복용파임 약을 채택하였으나 자신의 신체조건에 부적합하거나 부작용이 있어서 신체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이지은, 1979: 298).

정부차원에서 실시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은 1970년대의 폐미니즘운동의 여파와 함께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라는 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1970년대 말에 교수, 의사, 간호사, 약사, 기자, 사업가 등의 전문직 여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세부터 49세 사이의 전문직여성들은 자녀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주경란, 1980).

6. 1980년대의 여성과 가족

유신독재 시절 민주화를 외치다 구속당한 이들의 가족은 남들보다 몇 배의 고생을 겪었다. 긴급조치로 구속되어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한 어머니는 “뭣 때문에 3년을 감하느냐!”고 절규하였다(김한림, 1990). 1970년말의 위기는 체제전반의 위기로 치달았으며, 부산·마산지역의 반독재저항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저항의 조짐이 나타났다. 1979년의 10.26은 우리 현대사의 큰 분수령이다. 독재자의 피살로 활성화된 사회운동은 군부세력에 의해 저지당하면서 5.18 광주항쟁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민대상을 수상한 조아라씨는 광주항쟁을 어머니들이 어떻게 치루었는가를 증언한다.

“광주항쟁 때, 이틀이 지나니 그 살육이 어찌나 끔찍한지 온 시민이 눈이 뒤집힐 지경이여. 3일째 되니 온 시민이 한 마음이 되어 버렸어.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했제. 어머니들은 있는 쌀을 다 갖다 밥을 해서 “아나, 밥 묵고 해라”하고 차에다 올려주었어. 난리가 나면 뭣을 사서 둘라고 하지만 그 때 광주의 어머니들은 내일 어떻게 사나를 걱정하지 않았어. 오늘 산 사람이 먹어야지 하면서 “아그들아. 먹음서 혀라. 먹음서 혀.” 내 자식이 죽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도 광주의 자식이다 제자식이라고 그렇게 돌본 것이여. 상가도 다 철시를 하고 팔던 음료수니 먹을 것을 차에다 막 넣어 주고 그렸제(조아라, 1990: 306).”

여성운동은 1980년대에 들어 전체 사회운동과 민주화 물결에 힘입어서 진보적 여성운동으로 복원되고 재정립될 수 있었다. 1970년대의 여성운동이 생존권투쟁이나 민주화운동에 전념하였던 것에 대해 비해, 1980년대 여성운동계는 그동안 체계화되지 못한 여성운동이론의 정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에는 23개의 단체를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통합하여 전국적이고 동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여성대중과 폭넓게 교류하고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출판 및 문화매체의 다양한 발굴도 빼놓을 수 없는 1980년대의 성과이다. 1980년대 이후 ‘또 하나의 문화’의 가부장제 문화 타파와 새로운 여성문화운동으로 ‘여성신문’이 창간되었고, 미술·연극·영화·문학 등에서도 폐미니즘 문화활동이 확산되었다. 또한 ‘참교육학부모회’가 주부와 관심있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촌지없애기 등의 교육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그 외에도 여성학이론의 한국화시도, 가사노동의 가치환기, 사회운동 주체로서의 주부층의 발굴 등으로 1990년대 여성운동이 저변을 확대해 가는 힘이 되었다. 이리하여 운동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질시당하던 여성운동이 사회운동 내에 그 영역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운동을 보다 풍부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여성운동계를 파고 들어가 보면 정작 결혼에 관한 문제는

거의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되어서 운동의 차원에서 고려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운동에 참여한 여성은 많은 경우 자포자기하여 전업주부로 안주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1980년대 여성지식인이 여성의 결혼과 운동을 양립하기 어려웠음을 토로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80년대 여성운동 내부에서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가정생활에 관한 토론이 전혀 없었다. 세상과 조건이 변해가는데 따라 개인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집단적 사고는 없어서 정작 어려운 순간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었다. 처음엔 무척 혼란스러웠다. 한편 80년대는 운동과 연애, 결혼은 대립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운동과 결혼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주저없이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많았던 시대이기도 하였다(사량, 1995: 55).”

1980년대 이후에 중산층의 주부에게는 자녀세대의 신분상승이라는 지상과 제가 주어지게 되었다. 어머니들은 이를 위하여 물질적,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아버지는 돈벌이 기계, 엄마는 교육마마, 아이는 공부벌레’로 구분되는 역할구조는 1988년도에 은행원, 공무원, 회사원들의 부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사례) A부인의 하루 일과는 세 자녀의 도시락 싸는 일, 남편 회사에 출근 시키기, 매주 중학교에 상담봉사, 증권, 동창모임, 친정방문, 친구 만남 등으로 바쁘다. 오후 3시경 아이들이 돌아오면 숙제 봐주기, 식사준비, 남편 자가용으로 퇴근시키기 등으로 바빠 보낸다. 가정내의 모든 결정사항은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며 가끔 남편의 용돈문제로 다퉬다. 연금을 탈 예정이어서 노후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은행적금과 증권 투자를 하며 남는 방을 세를 주어 소득을 얻기도 한다. 부부와 세자녀는 영화구경, 방학 때는 여행을 한다(김자혜·김미숙, 1990: 94).

양육에서의 성별분업은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정과 일터의 성에 따른 분리로 가정만을 책임진 중산층 전업주부일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전자본주의사회에서 여성은 양육과 가사노동 및 여러 생산노동을 함께 하고 있었으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가사와 양육만을 담당하는 전업가정주부라는 집단이 생기게 된 때문이다(김혜경, 1992: 374). 그리고 자녀교육과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부가되면서 여성의 양육노동은 양육수단이나 초기양육의 상품화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강화되어 더욱 여성의 부담이 가중된다(김혜경 외, 1992).

그러나 맞벌이가 일반화된 노동자가족의 경우 남성들의 양육참여 양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부인이 전일제 취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계급 부부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은 대체로 비자발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녀 양육에 부분적인 뜻을 담당한다. 아버지들은 부인보다 퇴근시간이 빠른 경우 애들 밥 먹이고, 세수시키는 일을 하기도 하며, 혹은 애가 이뻐서 목욕시키고 머리 빗겨서 묶어주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양육은 기본적으로 여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남성들은 여성의 '도와주는' 수준의 분담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조합간부인 남성노동자는 이러한 원인을 장시간의 노동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생활자체가 애한테 관심가지며 살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어느 부모나 있으나 8시간 노동이 해결되지 않고는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임노동시간이라는 보다 큰 구조적 문제가 변해야지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다.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어도 몸이 피곤해서 안 따르고 시간도 없다(김미하, 1990: 224)."

1960년대 이후 연평균 8% 이상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1989년 14세 이상 여성경제활동인구는 727만 4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46.7%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여성들은 여전히 단순노동집약적인 의류, 봉제 등의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점차로 서비스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부분이 유홍·향락산업인 서비스직은 20대 전후의 미혼여성이 대량으로 취업하고 있어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강이수, 1992). 한편 198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기혼여성들의 취업은 남녀동등한 임금, 고용조건 등과 더불어 육아와 모성보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짧은 충일 수록 가사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되고 있는 문제는 가족내에서의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과 가족밖에서의 여성노동차별에 대한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는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전제하고 또한 유용한 인력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산아제한정책과 과학기술인력양성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특히 산아제한정책은 여러 차원에서 여성과 가족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총출산율은 1955-60년의 6.3명에서 1980-85년의 2.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의 남아선호 속에서의 출산통제는 자녀수를 한 두명으로 제한하면서도 아들을 낳을 때까지 태아의 성감별을 하여 인공유산을 반복하게 한다. 그 결과 1989년에 나온 정부조사는 기혼여성의 53%가 인공유산을 경험하였으며, 여성 한명당 평균 2.1회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여성이 하는 괴임이 지배적이므로 여성 이 받는 건강침해는 다른나라의 여성보다 심할 것으로 보인다(문소정, 1992: 335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히 팽창된 것은 성 산업이다. 성의 상품화, 여성의 상품가치를 적극 개발하는 성산업의 발전은 성이 하나의 오락, 여가문화의 형태로 쉽게 소비될 수 있는 상품이 되어서 혼인과 혼외관계에 이중적인 자리를 잡는다. 동시에 이러한 성문화를 저변으로 한 성산업의 발전은 강간, 성희롱, 인신매매 현상 등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문소정, 1992: 339).

가족법은 1957년과 1977년에 부분적으로 그리고 1989년에는 호주제와 동 성동본불혼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1989년의 개정 가족법은 호주의 권리와 의무를 대폭 삭제하고 친족범위에 모계8촌까지를 포함시켰 으며 이혼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고 어머니의 친권을 인정하는 등, 여성들의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확보하였다(박석분· 박은봉, 1994: 300).

7. 1990년대의 여성운동

1980년 후반의 올림픽,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사회의 변화 속에 있다. 1990년대 여성운동계의 흐름은 크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고용평등 정착, 성폭력 추방, 정신대운동, 지역여성운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995년 지방의회선거를 계기로 여성단체연합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 대하기 위해 '20% 지방의회여성참여'를 내걸고 좋은 후보 발굴과 여성의 정치의식고취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노동자 운동은 고용평등을 정착시 키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94년에 교사, 교수, 여성단체의 대 표 등 33인이 고졸 여사원모집에서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채용기준으로 제시 한 기업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사건은 여성의 특정한 신체조건을 문제삼는 성차별 현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는 최초의 활동이었다.

성폭력 추방운동은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1심 승소판결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문제와 관련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침서를 발행하는 등 문제 의식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1994년 4월 법원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해 '3천만원 배상'이라는 판결을 내 렸다. 여성계의 노력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3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1994년은 UN이 정한 '세계가족의 해'였다. 이에 '여성의 전화'를 주축으로 한

여성단체에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영화상영,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한국여성연구회, 1995: 328-330).

정신대로 더 알려져 있는 군위안부문제는 1990년 11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조직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정신대대책협의회에서는 중국에 생존해 있는 일본군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으며, 일본군대 위안부의 진상규명, 배상요구,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을 내용으로 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한 제소를 준비하였다. 한편 '동아시아 여성포럼'에서 참가자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국제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정현백, 1994: 376-377).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에서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한 영역이 주부운동이다. 주부운동은 시작 당시에 주부를 여성운동의 주체로 설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다수 여성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자 주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여성운동을 활성화 시켰다(한국여성연구회, 1995: 339-341).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운동은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면서도 다양한 연대를 모색하여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려고 한다(한국여성연구회, 1995). 그러나 여성문제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여성의 주체적인 삶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으나 자본주의의 논리에 지나치게 얹혀들어간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사량, 1995: 62). 1990년대의 한 여성지식인은 가정과 일에 대한 자아성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올바른 여성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가족상과 여성상’ 규명을 과제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정을 바라보는 태도가 80년대를 경과하며 내 안에서 참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 내게 가정은 일에 방해물, 필요악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자본주의 속에서의 노동은 사람을 피폐하게 하므로 가정만이라도 그 안에서 쉴 수 있고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가정과 일에 동등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자나 여자나 건강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을 중심에 두고 일을 조정해야 한다. 가정을 간파하는 사람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그 부분에 무능력자가 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인생의 기쁨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사량, 1995: 63).”

8. 돌아보며

해방후 50년 동안 이 땅의 여성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은 막중한 것이었다. 다만 그것이 여성을 뒷전에 두는 사회적 풍토에 가리워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

이다. 해방전에도 여성들은 가족의 실질적인 부양자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였다. 식민지의 조선여성으로서, 땅을 잃은 농민의 딸로서, 말로 할 수 없는 학대를 받으며, 오직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묵묵히 일했다. 단지 가난한 집의 딸이라는 이유로 정신대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기까지 다른 나라의 지배가 조선여성에게 미친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조국광복으로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여성들은 법제적으로 남녀동등한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었으나, 곧 이어 전국토를 뒤흔들어 놓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여성들은 가족원의 사망과 실종을 겪면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더우기 1960년대의 국가의 산업화로 많은 수의 미혼여성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의 섬유공장 등 비공식부문으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저곡가정책으로 이농현상은 가속화되고, 도시노동자의 저임금화를 촉진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은 여성들을 포함한 도시의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혹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본격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여성의 임노동화는 남성들을 위한 개인의 희생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다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더우기 사회전반적으로 교육기회의 확대, 여성운동의 파급, 출산조절 등은 여성들이 사회노동에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출산조절이 가져온 여성지위에 대한 효과는 여러 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출산조절, 부인취업, 남아선험약화, 가족법개편 등은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기여했다고 여겨지나, 국가가 개입하는 부부의 성문제, 높은 임신중절, 경제우선가치주의 등은 부정적인 면으로 지적될 수 있다. 더우기 성이 상품화되어 기생관광사업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고 매춘이 성행하는 현상은 성통제와 관련된 여성의 지위하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구속자가족의 어머니들과 광주항쟁에서의 어머니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기이기도 하다.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넓어져서 전문직으로 진출한 여성들은 평등한 고용조건 등을 내세우면서 여권운동을 주도하였다. 남아선험배격, 가부장제 배격, 호적제도 개정 등의 가족법 운동도 활발하였으나,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처우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친정으로부터 육아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 범위에서 모계중심의 새로운 생활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여성운동은 여성의 정치참여, 고용평등, 성폭력 추방, 지역 여성운동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1990년대의 중반에서 내다봐야 할 문제들은 성개방문제, 여성노인의 문제, 통일 후의 가족의 변화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계화의 파고속에서 국적이 다른 가족

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참고문헌

장이수

1992 “자본주의와 여성노동.” 『새로운 사회학 강의』.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
미래사.

공세권 외

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 가족생활주기 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인
구보건연구원.

교육부

1960-1995 「교육통계연보」.

경제활동인구조사개편연구회

1996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방향에 관한 종합보고서』. 통계청.

김경동

1979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 1967-1978.”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권
3호(12월): 31-62.

김경일

1992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 비평사.

1995 “해방후 한국 사회운동의 전개와 과제.” 『해방후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
동과 사회발전』.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사학회.

김기환

1995 “실업 및 불안정 취업의 구조 변화.” 전기사회학대회 발표 논문.

김낙중

1982 『한국노동운동사』. 청사.

김동춘

1995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역사비평사.

김미하

1990 “노동자 가족의 성별분업.” 『한국가족론』. 까치.

김수진

1992 “민주적 코포라티즘에 관한 비판적 고찰.” 『사회비평』 제8호.

김영모

1979 “한국사회의 직업구조와 그 변동에 관한 연구.” 『중대논문집』 23집:
313-335.

김용기 · 박승옥 엮음

1989 『한국노동운동논쟁사: 80년대를 중심으로』. 현장문화사.

김익진

1990 “운동노선을 통해 본 한국의 노동운동(I): 조선노동총동맹에서 조선노
동조합 전국평의회까지”. 김금수 박현채 외. 『한국노동운동론1』. 미래
사.

김자혜 · 김미숙

1990 “화이트 칼라 가족연구.” 『한국가족론』. 까치.

김장한 외

1989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김정근 외

1991 『한국영아의 사망률 추정 및 사망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정순

1993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변천과 현황.” 『대한의학협회지』 36(3): 271-284.

김종한

1995 “한국에서 산별노조론의 검토.” 『노동운동과 한국노동운동의 전망』. 한국산업노동학회 제2차 학술발표회 자료집.

김준

1993 『아시아 권위주의 국가의 노동정치와 노동운동: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진균

1996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와 특징: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전개 과정과 주요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1권 2호.

김진영

1994 “정보기술과 화이트칼라 노동과정의 변화: 은행 및 보험기업의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28집(봄호): 143-175.

김필동 · 김병조

1995 “해방 후 한국사회의 발전과 사회조직의 변화.”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4권. 사회 편.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 한국학술진흥재단, pp. 265-329.

김현희

1994 “노동자의 조직화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학』 제28집 가을호.

김훈 · 황석만

1995 “여성인들의 노동시장 참가실태와 과제.” 『노동동향분석』 8(4): 113~134.

김혜경.

1999 “자본주의와 가족, 여성.” 『새로운 사회학 강의』.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미래사.

김혜경 · 오숙희 · 신현옥

1992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한국가족의 역할 변화.” 『여성과 사회』 제3호, 한국여성연구회편.

김태현 외.

1995 “인구의 성장과 구조.” 권태환 외 공편, 『한국의 인구와 가족』. 3-125, 일신사.

권태환 · 김태현

1990 『한국인의 생명표, 1970-85년의 사망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출판부.

노동부

- 1995 『노동통계연감』.
- 노중기**
- 1995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1987-1992.”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노창섭 · 김종서 · 한상준**
- 1965 『개발과정에 있는 농촌사회연구』. 이대출판부.
- 문소정**
- 1992 “가족과 여성.” 『오늘의 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
- 민경희**
- 1986 “노동력의 인구학적 함의.” 한상복 · 권태환 편. 『경제인구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경애**
- 1991 “농촌의 인구이동에 관한 생태학적 고찰.” 『한국사회학25』(여름): 21-32.
- 1993 “성비가 가족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27』(여름): 153-166.
- 1995 “한국인의 사망원인구조, 1983-1993.” 『한국인구학회지』 18(1): 167-193.
- 박덕재 · 박기성**
- 1989 『한국의 노동조합(I)』.
- 1990 『한국의 노동조합(II)』.
- 박명선**
- 1991 “월남한 가족의 경제생활사: 1950년대를 중심으로.” 『여성, 가족, 사회』. 열음사.
- 박석분 · 박은봉**
1994. 『인물여성사』. 새날.
- 보건복지부**
- 1949-1994 「보건사회통계연보」
- 배규한**
- 1989 “한국의 공업화와 근로자의식의 변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7권 3호.
- 배봉기**
- 1990 『이야기 여성사』. 제2장. 여성신문사.
- 사랑**
- 1995 “80년대 여성지식인의 자화상.” 『여성과 사회』 제6호. 창작과비평사.
- 서연미**
- 1979 “성과 노동.”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비평사.
-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 1990 『전환기의 한국사회: '89 국민의식조사』. 미간행 조사 자료집. 1월.
- 선한승**
- 1993 『노동문화연구(I): 노동의 가치와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설동훈**
-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성한표

1984 “8·15직후의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한국사회연구 2』. 한길사.
손봉숙·우정자·이숙진

1995 『엄마의 일자리 딸의 일자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송호근

1991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나남.
1993 “유럽의 노동운동, 1870-1939: 탈급진화의 정치사.” 『계간사상』 봄호.
1994 『열린 시장, 닫힌 정치』. 나남.

신광영

1990 “노동조합, 조직, 이데올로기: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과 불평등』. 나남.
1994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점령군의 노동정책 비교연구.”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나남.

신인령

1990 “한국의 조직근로자와 여성.” 『한국 여성과 일』. 이대출판부.
어수봉

1994 “우리나라 노동통계의 주요특징.” 노동경제학회 발표 논문.

유현

1990 “1929년 원산총파업 연구: 20년대말 노동운동의 변화양상과 관련하여.”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논문.

윤묘희

1990 『이야기 여성사』. 제6장. 여성신문사.

윤수종

1992 “한국사회와 사회운동.” 『오늘의 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

윤종주

1986 “해방 후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사회사적 의의.” 『인구문제논집』 27: 17-36.

윤진호·정영태

1995 “한국노총과 전노대의 조합원 의식 비교연구.” 한국사회경제학회 엮음.
『한국자본주의와 노동운동』. 한울.

이각범·이은진·초의수

1995 “해방 50년 노동구조의 변화.”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pp. 5-63.
한국사회학회·한국사회사학회.

이만갑

1973 『한국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상백·김채윤

1966 『한국사회계층연구』. 민조사.

이지은

1979 “오늘의 농촌여성.”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비평사.

이인효

1992 “교직의 여성화와 교직 사회의 변화.” 『교육개발』 14(1): 43-47.

이종범

1994 “교직의 여성화 추세가 학생지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관리기술』

25(4): 60-67.

이효재

1989 “분단시대의 여성운동.” 『한국의 여성운동』. 제8장. 정우사.

임선희

1992 “교직의 여성화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고찰.” 『충남대 교육발전논총』 13(1): 119-138.

임혁백

1994 “한국 노동정치의 변화와 연속성.” 『시장·국가·민주주의』. 나남.

임현진·김병국

1993 “제6공화국의 노동정책: 국가의 실패, 노동의 좌절, 자본의 농성.” 미 발표논문

장명국

1990 “해방후 한국노동운동의 발자취.” 김금수 박현채 외. 『한국노동운동론 1』. 미래사.

장하진

1995 “70년대 세대의 여성적 체험.” 『여성과 사회』 제6호. 창작과비평사.

정현백

1994 “한국여성운동사.” 『여성학강의』. 제13장. 동녘.

조돈문

1994 “제3세계에서의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경제와 사회』 제21호. 봄호.

조승혁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운동』. 성대 박사논문. 한울.

조아라

1990 『이야기 여성사』. 제17장. 여성신문사.

조 은

1990 “도시빈민 가족의 생존전략과 여성.” 『한국가족론』. 까치.

주경란

1980 “한국전문직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한국사회학』. 제14집.

주학중·김태현

1994 “남녀인구의 불균형추이와 사회문제의 전망.” 『인구문제논집』 28: 49-96.

조대희·김유경

1992 『최근의 출산력 변동요인과 인구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용수

1996 『한국의 신세대 혁명』. LG경제연구원.

조우현

1985 “고용통계개선방안에 관한 일연구.” 『노동경제논집』. 서울: 한국노동경제학회.

조윤성

1987 “경제발전과 노동시장·취업구조의 변화.” 『노동경제논집』. 서울: 한국노동경제학회.

진수미

- 1995 “조직과 직업구조: 연구동향과 과제.” 『광복50년 한국사회와 사회학』.
1995년 한국사회학회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10월 20일, 국민대학교.
- 차경수
1983 “교원의 직업적 위신과 그 관련요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범문사, pp. 241-258.
- 최민지
1979 “한국여성운동 소사.”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비평사.
- 최장집
1989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 최진호
1995 “지역간 인구분포.” 권태환외 공편, 『한국의 인구와 가족』. pp. 129-
235. 일신사.
- 통계청
1962 『경제활동인구조사 — 조사원의 벗』. 서울: 통계청.
1963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서울: 통계청.
1973 『인구동태 표본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지침』. 서울: 통계청.
1978 『인구동태 표본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지침』. 서울: 통계청.
1989 『인구분석보고서』.
1991 『한국의 장래인구추이』.
1992 『한국표준직업분류』.
1993 『1991년 생명표』.
1994 『인구동태통계연보』.
1994b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서울: 통계청.
1995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서울: 통계청.
1995b 『1994 사망원인통계연보』.
1995c 『1994 인구이동통계연보』.
1995d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6 『1995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결과』.
- 편집실 구성
『간추린 한국노동운동사』. 1985, 인간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 『한국사회의 노동통제』. 민중사.
- 한국노동연구원
1994 『KLI 노동통계』.
- 한국사회연구소
1988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독점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백산서당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1994 『산별노조론』. 미래사.
- 한국여성연구회 대외사업부
1995 “여성운동의 흐름.” 『여성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 한겨레21

제109호, 1996. 5. 23.

허명구

1990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전태일기념사업회 편, 『한국 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 세계.

허상수

1990 “‘8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토론문.” 전태일기념사업회 편, 『한국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 세계.

홍두승

1983 “직업 및 계층구조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사회학회 편. 현대사회연구소.

1992 “분배적 정의와 형평의식.”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황일청 편. 나남, pp. 141-170.

홍두승 · 안치민

1995 “해방 50년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와 그 변화.”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pp. 65-96.

Cho, N.H., M.S. Hong, and I.H. Kim

1994 “Effects of Induced Abortion and Son Preference on the Imbalance of Sex Ratio in Korea,”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7(2): 77-97.

Coale, A.J., Cho, L.J., and Goldman, N.

1980 *Estimation of Recent Trends in Fertility and Mort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Committee on Population and Demography,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Washington, D.C.

Geroge Ogle

1973 *Labor Movement in South Korea*,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Goldman, N.

1980 “Far Eastern patterns of mortality,” *Population Studies* 34(1): 5-19.

Hussmanns, Ralf, Farhad Mehran and Vijay Verma

1990 *Survey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An ILO Manual on Concepts and Method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83 “Thir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Geneva, 18-29 October 1982” and appendix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in *Bulletin of Labour Statistics* (Geneva), 1983-3, Pp. ix-xv.

Kelly, Patricia R.

1989 “Teacher Status: What Students Think about the Profess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Teacher Educators.

- Kim, D.S.
- 1994 "The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Korean Peninsula, 1910-1990,"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3(2): 131-155.
- Ko, Sung Ho.
- 1994 "Urban Growth in Korea, 1970-1980,"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3(1): 1-18.
- Kwon, Tai Hwan.
- 1977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1981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Robert Repetto et al. ed.,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 1986 *The Trends and Patterns of Mortality and Health in the Republic of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76. Bangkok: ESCAP, United Nations.
- Lee, E.S.
- 1985 "Epidemiologic Transition in Korea; a New Perspective in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Vol. XIV: 1-14.
- Lortie, Dan C.
- 1975 *Schoolteacher: A Sociological Stud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mran, A.R.
- 1971 "The Epidemiologic Transition: a Theory of the Epidemiology of Population Chang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49(4): 509-538.
- Park, C.B. and N.H. Cho.
- 1995 "Consequences of Son Preference in a Low-Fertility Society: Imbalance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1): 59-84.
- Pritchard, Rosalind M.
- 1983 "The Status of Teachers in Germany and Ireland."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27(3): 341-350.
- Strober, Myra H. and David Tyack.
- 1980 "Why Do Women Teach and Men Manage? A Report on Research on Schools." *Signs* 5(3): 494-503.
- United Nations.
- 1982a *Levels and Trends of Mortality Since 1950*, Dept.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ESA/SERA/74.
- 1982b *Model Life Tables for Developing Countries*, Dept.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ESA/SERA/77.